2019
05
vol. 630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 소식지

국회보

SINCE 1949

가족의 의미를

버팀목이 되는

삶의 든든한

되새깁니다

간행물발간등록번호
31-9710176-000680-06
ISSN 1975-7581

국회보

SINCE 1949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 소식지
Vol. 630, May 2019

[표지이야기]

5월은 신록의 계절이자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삶의 든든한 버팀목인
가족이 있어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나 한결같은
믿음을 주는 나의 편.
국민을 향한 국회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발행일 2019년 5월 1일
발행인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편집인 이춘규 홍보기획관
국회홍보출판위원회
한공식 위원장(입법차장)
김승기 위원(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위원(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위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장대섭 위원(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홍형선 위원(기획조정실장)
이용준 위원(법제실장)
이강혁 간사(홍보담당관)
편집실무위원회
윤상은(보좌관), 제방훈(보좌관), 최정배(서기관)
편집실무진
글 김종해(취재보도 사무관), 김현아, 고영선, 박민선, 서기정
사진 김지범(촬영사무관), 임진완, 김진원, 유윤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788-2058 book@assembly.go.kr
디자인·인쇄 세일포커스(주) 02)2275-6894

※ 이 책의 우측 상단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04 지금 국회에서는
국회,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 행사 개최
문희상 국회의장 국회 개혁 1호 '법안소위 활성화' 법안, 본회의 통과
4·3 보궐선거 당선인, 본회의 선서로 의정활동 시작
국회사무처, 사전 정보공개 대상 확대방안 발표

특집_ '사회재난' 된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12 '농도' 저감보다 '배출' 저감 대책 세워야_ 문길주
14 미세먼지 저감, 한·중 협력 등 국제 공조 필요_ 손승표
16 'LA 스모그', 대기관리 기구 통합해 극복_ 김용표
18 독일의 도심 공기질 개선을 위한 LEZ 운영_ 황승기
20 환경정책, 객관적이고 책임감 있게 검토해야_ 지현영

22 위원장 초대석_ 이찬열 교육위원장
교육은 미래 디딤돌이자 희망의 사다리
24 길에서 길을 찾다_ 김종민 의원
충절이 어우러진 풍요로운 금수강산
28 칭찬합시다_ 전혜숙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복지 사각지대 없애는 보건의료 전문가

30 나의 애송시_ 채이배 의원
삶이란 늘 잔치가 시작되고, 끝나는 것

32 나의 인생 나의 정치_ 이진복 의원
열혈 청년에서 민생 정치인으로 뛰다

34 일하는 국회 공부하는 국회
학교 미세먼지 해결·지방자치법 개정 등 토론회 열려

38 법률 시대를 읽다
'건축물관리법' 제정_ 장대섭

40 법 시행 현장을 가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42 만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44 위원회는 지금
국회, 인사청문회 및 강원도 산불 현안보고

48 따끈따끈 새 법률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26건 의결

52 국회 뉴스

60 임시의정원 사람들
초대 대통령을 탄핵한 임시의정원 의원들_ 한시준

63 국회스케치

64 경제이야기
30대, 40대가 귀해지고 있다_ 이진우

66 취재수첩
'돌아온 선거철' 국회는 어떤 모습으로 비칠까_ 김문영

68 미래과학을 읽다
전선 없는 세상 올까 - 무선전력전송 기술_ 고호관

70 오천년의 숨결, 우리 유물을 찾아서
종교적 사유와 그윽한 미소, 반가사유상의 미학_ 이광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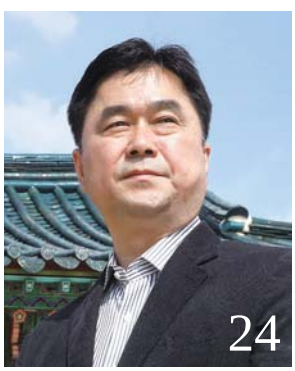
74 역사 속 길을 찾아
연둣빛 산천에 안긴 옛 사람의 정자_ 장태동

77 생활 속 우리말글
기능에 따라 달라지는 띄어쓰기_ 김미형

78 그때 그 사건
'재야정당', 민추협 탄생

79 정치 관련 주요 일지

80 편집 후기
신선한 숲 같은 정치_ 이춘규



국회,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 행사 개최

문희상 국회의장이 4월 10일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올해는 '대한민국'이란 국호를 정하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최초로 천명한 임시의정원이 탄생한 지 100주년을 맞는 해다. 이를 기념해 국회는 4월 10일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새로운 100년을 향한 도약의 의지를 다졌다.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위해 1919년 4월 10일 중국 상하이에서 출범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임시의정원은 우리 역사상 최초의 근대적 입법기관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있다"며 "임시의정원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통해 우리의 조국이 '제국에서 민국으로, 황제의 나라에서 국민의 나라'로 새롭게 거듭났음을 천명했다"고 강조했다.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홍진 임시의정원 의장 흉상 제막식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어 “오늘의 국회가 임시의정원이 표방했던 민주적 공화주의와 의회주의의 가치를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라며 “현재를 사는 정치인은 새로운 100년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깊은 고민과 성찰이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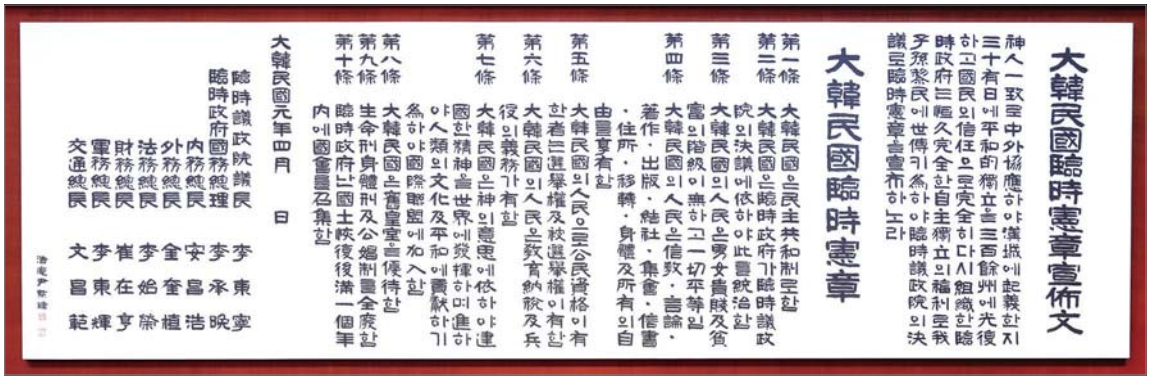
임시의정원 관인 전달식

문희상 국회의장, “국민통합으로 새로운 100년 향해 나아가야”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은 좌와 우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을 지향했다”면서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절실한 과제는 국민통합이다. 온 국민이 마음을 모아, 힘을 모아 새로운 100년을 향해 나아가자”고 말했다.

이날 기념사에 앞서 제1회 임시의정원 회의를 재현한 기념극과 임시헌장 낭독식이 열렸다. 특히, 초대 의장을 지낸 이동녕 선생의 손녀 이경희 여사, 김동삼 선생의 손녀 김복생 여사, 이회영 선생의 손자 이종찬 전 의원과 이종걸 의원 등 임시의정원 유족들이 임시헌장을 낭독해 의미를 더했다.

이와 함께, 임시의정원이 수립된 이래 광복 후 1945년 8월 22일까지 사용됐던 관인(官印)이 고국의 품으로 돌아오는 ‘임시의정원 관인 전달 및 감사패


大韓民國臨時憲章宣佈文

神人一致로中外協應하야檀檄에起義한지
三十有日에平和的獨立으로三百餘州에光復
하고國民의信任으로完全히다시組織한臨
時政府는暫久完全한自主獨立의福利로我
子孫黎民에世傳키爲하야臨時議政院의決
議로臨時憲章을宣布하노라

大韓民國臨時憲章

第一條 大韓民國은民主共和制로함
第二條 大韓民國은臨時政府가臨時議政
院의決議에依하야此를統治함
第三條 大韓民國의人民은男女貴賤及貧
富의階級이無하고一切平等임
第四條 大韓民國의人民은信敎·言論·
著作·出版·結社·集會·信書
·住所·移轉·身體及所有의自
由를享有함
第五條 大韓民國의人民으로公民資格이有
한者는選擧權及被選擧權이有함
第六條 大韓民國의人民은敎育納稅及兵
役의義務가有함
第七條 大韓民國은神의意思에依하야建
國한精神을世界에發揮하며進하
야人類의文化及平和에貢獻하기
爲하야國際聯盟에加入함
第八條 大韓民國은皇室을優待함
第九條 生命刑·身體刑及公娼制를全廢함
第十條 臨時政府는國土恢復後滿一個年
內에國會를召集함

大韓民國元年四月 日

臨時議政院議長 李東寧
臨時政府國務總理 李承晩
內務總長 安昌浩
外務總長 金奎植
法務總長 李始榮
財務總長 崔在亨
軍務總長 李東輝
交通總長 文昌範

국회의사당 중앙홀에 걸린 대한민국 임시헌장 서예 작품

증정식'이 진행됐다. 임시의정원 마지막 의장을 지낸 홍진 선생의 손주며느리 홍창휴 여사가 관인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전달하고, 문 의장은 홍 여사에게 감사패를 증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관인은 각종 공문서에 사용됐던 국새(國璽) 격의 도장이다.

홍진 임시의정원 의장 흉상 제막식 열려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식에 앞서 4월 10일 오전 '홍진 임시의정원 의장 흉상 제막식'이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만오(晩悟) 홍진(洪震) 선생은 1877년 서울에서 출생하여 1904년 법관양성소를 졸업한 법조인 출신 독립운동가다. 그는 상해 임시정부 27년 동안 세 번의 임시의정원 의장과 임시정부 국무령을 역임하면서, 상해 임시정부 수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제막식에 앞서 입법·사법·행정부 주요 인사가 모인 사전 환담자리에서 "5당 원내대표들의 제안과 의원들의 만장일치 의결로 홍진 의장님의 흉상을 건립하게 됐다"면서 "그분은 독립운동사에 큰 발자취를 남기셨고, 좌우익 세력을 통합해 통일의회를 꾸리는 등 협치를 위해 애쓰신 분"이라고 말했다.

'국회 100년의 봄' 등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행사

국회는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을 기념해 4월 한 달 동안 다양한 전시, 특집방송, 학술세미나 등을 마련했다.

먼저, 국회는 헌정기념관 지하 1층 기획전시실에 '임시의정원, 미래를 품다'라는 주제로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임시의정원 관련 기록물·사료를 특별 전시했다. 이번 특별전은 국민에게 임시의정원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전시로 상해, 중경, 서울 등 공간에 따라 구성됐다.

또한, 여의도 봄꽃축제 기간인 4월 5일부터 11일까지 여의서로에 임시의정원의 역사적 의의를 알리는 '임시의정원 100주년 홍보관'이 설치됐다. 홍보관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을 비롯한 국회 간부들과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 식수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는 임시의정원의 주요 활동을 소개하는 전시와 임시헌장 탁본 체험, 포토존 등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4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국회 잔디마당에서는 2019년 국회개방행사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국회 100년의 봄'이 개최돼 눈길을 끌었다.

첫째 날에는 가수 폴킴과 울랄라세션이 출연하는 축하공연 '임시의정원의 봄을 잇다', 둘째 날에는 역사강사 최태성이 진행하는 특별 토크쇼 '임시의정원 100년, 내일을 열다'가 열려 방문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 외에도 '임시의정원 백주년 떡 나눔', '도전! 임시의정원 골든벨', '1919년 의복 체험', '독립운동 VR체험', '3·1독립선언서 캘리그라피' 등 당시 시대상을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은 4월 10일 국회 잔디마당에서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을 기념해 50년생 적송을 식수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심은 적송은 잔디광장 주변에 역대 국회의장 기념 식수목과 나란히 심어졌다. 이날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국회 정입초소 옆 녹지에 30년생 소나무를 식수했다.

헌정기념관 지하 1층 기획전시실에서 열린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 특별전을 둘러보고 있는 문희상 국회의장

문희상 국회의장 국회 개혁 1호 '법안소위 활성화' 법안, 본회의 통과

국회는 4월 5일 본회의를 열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법안소위 활성화'를 위해 제안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소관 법률안 심사를 분담하는 둘 이상의 복수 소위원회를 둘 수 있게 하고, 소위원회를 매월 2회 이상 열도록 정례화하는 내용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오늘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앞으로 법안소위가 연중 상시적으로 운영되어,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개혁법안의 심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취임 일성으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연중무휴 상시국회'로 '일 잘하는 실력국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국회 개혁의 제1호 법률로 소위원회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안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각 상임위에 복수의 법안소위가 설치돼 상임위원들의 법안심사 참여 범위가 확대될 뿐만 아니라, 법안소위에 상정되지 못한 상당수의 법률안이 임기 말 폐기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회 법률안 심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법안소위 활동이 활성화돼 입법의 큰 성과를 냄으로써 '일하는 국회상'을 정립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자청원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오는 12월 1일부터 '전자청원시스템'을 통해 일정 수 이상의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으면 국회의원 소개 없이도 국회에 청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4·3 보궐선거 당선인, 본회의 선서로 의정활동 시작

여영국 의원

정점식 의원

지난 4월 3일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여영국 의원(정의당, 경남 창원시성산구)과 정점식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통영시고성군)이 각각 당선됐다. 두 당선인은 4월 5일 열린 제367회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선서를 한 후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여영국 의원은 인사말에서 "많은 지지를 보내준 주민과 성원해준 국민께 감사한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 자신은 "창원에서 선반공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해 노동조합 활동을 거쳐 경남도의원 활동을 했다"며 "지금은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선반공으로 이 사회에 첫발을 디뎠던 그 초심 그대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리고 고(故) 노회찬 의원의 정신을 이어받아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대다수 국민들의 삶을 바꾸고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기 위해 저 역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점식 의원은 자신을 믿고 선택해준 주민들께 감사를 드린 다음 "이번 선거를 통해 무너진 통영·고성의 경제와 더욱 어려워진 서민의 삶, 안보에 대한 걱정은 더욱 커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통영·고성 주민 여러분들의 준엄한 명령을 받아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실행하는 것이 우선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주민 여러분들의 절절한 염원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의회민주주의의 전당 국회에서 대한민국의 활기찬 미래를 위해 뛰겠다"는 말로 각오와 포부를 밝혔다.

국회사무처,
사전 정보공개 대상 확대방안 발표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 사진 중앙)는 4월 1일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사전 정보공개 대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과 지원경비, 의원 해외출장 내역, 본회의와 위원회 출결현황 등 국회의 사전 정보공개 대상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지금까지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람에게만 해당 자료를 제공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국민이 볼 수 있도록 국회 홈페이지에 미리 공개된다.

앞서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자문위원회 권고에 따라 국회 정보공개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 결과, 올해 1월부터는 국회 소속기관의 부서장까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홈페이지에 매월 공개하고 있다. 그 후속 조치로 이번에 '사전 정보공개 대상 확대방안'을 확정, 발표한 것이다.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적극적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은 물론 국회가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더욱 충실한 입법활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전 정보공개 대상 목록>

구분	공개항목
국회의원 입법활동 (6개)	△국회의원 수당(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의원실 의정활동 지원경비(사무실 운영비,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공무수행출장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정책자료 발송비, 보좌직원 매식비, 입법활동지원 정책현안 현지출장비, 정책자료 발간 및 홍보물 유인비, 업무용 택시비 등), △국회의원 해외출장 결과보고서, △국회의원 연구단체 예산집행 내역, △우수 국회의원 및 연구단체 선정내역, △본회의 및 위원회 출결현황
국회 조직 및 운영 (11개)	△국회인력 통계, △국회관계법규, △국회 소관 법인 등록 및 예산 내역, △국회의장 자문기구 현황,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현황, △주요업무계획, △주요계약현황, △예산편성 현황, △국회 회의실 사용 현황, △국회 관용차량 현황, △공공요금

특집

‘사회재난’ 된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국회는 지난 3월 13일 본회의를 열고 10건의 법률안을 처리했습니다. 그중 8건이 미세먼지 관련 법으로 가히 ‘미세먼지 대책 본회의’였습니다.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해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다루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국회보에서는 날로 악화되고 있는 미세먼지 대책을 알아보고자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미국 LA의 미세먼지 극복 과정과 독일이 현재 진행 중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리라 봅니다. 〈편집자 주〉

‘농도’ 저감보다 ‘배출’ 저감 대책 세워야 ····· 문길주 총장
미세먼지 저감, 한·중 협력 등 국제 공조 필요 ····· 손승표 교수
‘LA 스모그’, 대기관리 기구 통합해 극복 ····· 김용표 교수
독일의 도심 공기질 개선을 위한 LEZ 운영 ····· 황승기 독일 주재관
환경정책, 객관적이고 책임감 있게 검토해야 ····· 지현영 사무국장

'농도' 저감보다 '배출' 저감 대책 세워야

문길주 총장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민간공동위원장

미세먼지가 남녀노소, 지역, 빈부를 막론하고 만인의 화젯거리다.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뒤덮으면서 외출할 때조차 밖에 비가 오는지보다는 미세먼지 농도가 어떤지가 더 큰 관심사다. 통계청이 지난 3월 발표한 '2018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의 82.5%가 미세먼지에 대해 '불안하다'고 답했다. 방사능(54.9%)과 화학물질(53.5%)을 비롯해 기후변화(49.3%), 농약비료(45.6%), 수돗물(30.4%)보다 불안 수준이 높았다. 또한 서울의대 연구팀이 지난해 6월 초미세먼지 농도와 연령 등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연평균 1만 1천 924명이 초미세먼지 노출로 조기 사망했을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이는 국토부에서 집계한 2018년 한 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인 3천781명보다 3배 이상 많은 수치다. 이제 미세먼지 문제는 대한민국 공동체 구성원들이 해결해주기를 바라는, 첫 손가락에 꼽히는 사회재난인 것이다.

그렇다면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은 무엇인가? 안타깝게도 미세먼지 원인은 어느 한 가지로 명확히 규정할 수 없다. 미세먼지는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대기오염 배출량, 기후의 변화, 국외로부터의 유입, 2차 생성 미세먼지(여러 기체 물질이 결합해 만들어지는 미세먼지)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생성되기 때문이다. 이렇듯 발생 원인이 복잡하니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들 과정에 대한 과학적이고 정량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과학적인 이해에 근거하지 않은 단편적인 관리만으로는 농도를 줄이기 힘들며, 줄이더라도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 목표는 '농도' 저감보다는 '배출' 저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농도 관리에서 배출 관리로 정책 목표를 변경하면 미세먼지로 인한 영향을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 수단도 보다 다양화할 수 있다. 2017년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서도 일반 대기오염 물질 중심의 관리에서 인체 위해성 저감 중심의 관리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내용이 발표됐다.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적 대책으로는 미세먼지에 의한 배출 저감을

통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장기적 대책으로는 미세먼지 총량 관리 차원에서 오염물질 배출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둬야 한다. 더불어 어느 쪽이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다섯 가지 대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미세먼지 위기관리체계 구축해야

첫째, 미세먼지 위기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위기관리 개념에서 체계적인 상황별 분석을 통하여 미세먼지 문제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전국 단위의 대기관리 체계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 인천 등의 수도권 권역과 충남, 충북, 대전 등의 충청권역 등 권역별로 미세먼지 생성 특성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저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실내 미세먼지도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은 실내에서 주로 생활하며 민감계층은 더욱 그렇다. 따라서 인체 영향 측면에서 보았을 때 실내 공기질이 일반 대기질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해 실내 미세먼지 유지 기준을 실외와 구분해 설정해놓았다. 그러나 측정 주기나 기준값에 대한 끊임없는 검토가 필요하며 적용 대상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

셋째,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단기적인 사업으로는 국지적인 노출 저감 차원에서 어린이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확대, 공동주택 미세먼지 정화장치 설치 등을 사례로 들 수 있다. 또한 생활권 내 교통수단의 경우 대부분 생계형 교통수단이므로 억제 정책보다는 인센티브 제공 등과 같은 포지티브 정책을 통해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기존 연구 결과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보완된 연구 방향과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정확한 현상 이해를 통한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아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까지 미세먼지와 관련된 국내외 연구 결과와 이와 관련된 대책을 재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다학제적 통합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의 대기(미세먼지) 및 지구환경 연구소 설립도 고려할 시기다. 미세먼지 현상을 통합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반쪽짜리 연구 결과와 이에 기초한 엉성한 정책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전향적인 동북아시아 호흡공동체 구축이 필요하다.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황사, 산성비, 장거리 대기오염물질 등의 국가 간 이동에 대해 국제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NEASPEC(North East Asian Subregional Programme of Environmental Cooperation : 동북아 환경 협력 프로그램 사무국) 등 국가 차원의 협력이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으나 국가 간의 이해관계, 정치적 긴장 등의 이유로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동북아시아 지역이 환경적으로도 세계 중심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단일 국가의 이해관계를 벗어나 호흡공동체 관점에서 국제협력이 중요하다. 구체적인 추진 업무 제안으로는 △관측자료 공유를 통한 미세먼지 예보의 정확도 제고 △공동연구를 통한 미세먼지 생성원인 규명 및 건강영향 파악 △미세먼지 백서 발간을 통한 과학적 대응 △국제기구 창설과 실효성 있는 호흡공동체 추진 등이 있다.

이제 더는 시간이 없다. 미세먼지 문제는 이미 우리 사회의 최대 현안이 됐으며 무엇보다 정부 및 국민 모두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다.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신뢰성 있고 실용적인 정책을 통해 미세먼지 문제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국민들과 끊임없는 소통으로 이해와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내야 할 때다.

미세먼지 저감, 한·중 협력 등 국제 공조 필요

손승표 교수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지난 4월 16일 우리 국회의원들이, 국내 환경 분야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인 미세먼지 저감 협의를 위한 국제 공조와 공동 대책 마련을 논의하기 위해 중국 현지를 방문하려던 계획이 연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을 포함한 여야 의원 8명은 중국 생태환경부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방문 계획을 중국 측에 먼저 제안한 바 있다. 방문이 무산된 것은 주중 한국대사관을 통한 중국 정부의 완곡한 부담 표시가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중국 측의 국제 협조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22일~23일 서울에서 열린 한·중 환경협력 공동위원회에서는, 이미 양측이 대기질 예보 정보 및 예보 기술 교류 프로그램(미세먼지 조기 경보체계)의 진행을 착수함과 동시에, 올해 하반기에 개최되는 제21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21)에 보고하기로 합의된 바 있다. 또한 중국 측의 '청천(晴天) 프로젝트'의 조사대상 지역과 관측방식도 함께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중국 측과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East Asia 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ion) 연구 요약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한 양국간 합의 결과에 따라, 연구 결과가 나온 이후에야 실제적으로 본격적인 책임 소재 및 각국 간 의무부담 비율 등 세부 협의가 가능할 전망이다.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 통해 국제 공조 노력 중

현재 우리나라는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해결 범국가기구인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반기문 전 UN사무총장) 출범 등을 통해 다양한 국제 공조 노력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반기문 위원장은 최근 한 세미나에서 "국가기후환경회의 아래 국민의 총의를 모으기 위해 500여 명 규모의 국민정책참여단과 석박사급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은 우리의 미세먼지 저감 노력이 충실하고 객관적으로 이행된 결과의 축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선행결과를 필요조건으로 한다.

국제 외교적 해결의 첫 단추는 관련 이슈와 관련된 상대 국가들의 합리적인 설득을 위해, 결의된 배정 분담금의 납부와 이로 인해 권위를 얻은 발언권 및 영향력의 확대다. 그러나 최근 국내 대기업 등 235곳 사업장들의 미세먼지 배출량 조작과 관련된 언론 보도는 향후 중국 측에 우리가 요청하게 될 다양한 어프로치들(접근)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치명적인 논리로 작용하게 될 것임이 자명해 보인다.

향후 우리가 중국 측과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2018년 하반기 중국 측이 10여 년 전과 비교한 베이징의 공기질 데이터를 대대적으로 공개해 중국 정부의 환경 부문 노력의 성과를 대내외에 과시한 사실의 근저에 무엇이 깔려 있는지를 냉철하고 명확하게 인식하여, 이에 상응할 만한 객관적인 데이터 확보에 우선 주력해야 하겠다.

국내 미세먼지 저감 노력 병행돼야

이에 국내적으로 가능한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살펴보고, 우리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 관련 국제 공조를 위하여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들을 제언해 보고자 한다.

실제로 대기질 오염 정도가 매우 높던 시절에는 연료 정책이나 배출가스 규제 몇 가지 정책만으로도 쉽게 오염을 개선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미세먼지 오염도가 개선될수록 점점 추가적인 개선을 이루어내기가 기술적으로 어려워진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했던 중소규모 오염원들에 대해 추가적으로 철저하게 관리해나가는 것이 국내적으로 가능한 미세먼지 저감의 최선의 노력이라 할 수 있겠다. 이 외에 다른 특별한 방법은 없다.

미세먼지 오염을 우리의 절반 수준까지 낮추는 데 성공한 미국, 유럽, 일본 어느 국가도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현재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일반적인 마스크 사용, 공기청정기 설치, 초·중·고교 내 측정망 설치 등은 향후 주변국들과의 공조를 위한 중장기적이고 꾸준한 국내 환경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위한 선결 과제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하겠다.

선진국들의 대기오염 개선 역사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교훈은 모든 대규모 도시 대기오염의 주원인이 화석연료와 자동차 사용의 증가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량 증가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자인하고, 화석 연료와 자동차 사용으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는 정책의 마련과 꾸준한 실행이 해결 방법의 첫걸음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연료 사용을 줄이며 효율을 높이고, 오염물질 배출을 감소시키고, 차량 배출가스를 규제하고 차량 운행을 줄이는 모든 대책은 미세먼지 감소에 매우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존재함이 이미 입증되었으므로 비용 대비 효율의 높고 낮음을 정확하게 분석해 시급한 현안과 중장기 과제 등을 적절하게 배분해야 한다.

당장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적더라도 지속적인 노력으로 시스템적인 대기질 개선 노력이 병행될 때,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청정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국내적인 미세먼지 저감 노력이 병행될 때, 비로소 우리가 세계기상기구(WMO),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4),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를 통해 이뤄나가려는, 동북아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변화 대응 국제 공조에 당당히 나설 수 있을 것이다. 그럴 경우에 다양한 조치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LA 스모그', 대기관리 기구 통합해 극복

김용표 교수
이화여대 화학신소재공학과

국민들이 미세먼지 문제로 불안해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2013년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2019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까지 계속 노력하고 있지만, 2019년 3월 KBS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80% 이상이 정부의 미세먼지 대응에 대해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효과적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해 국민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미세먼지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 비슷한 문제를 이미 겪었고 어느 정도 해결한 외국 사례를 잘 이해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는 'LA 스모그'로 악명이 높았던 미국 로스엔젤레스(LA) 지역에서 미세먼지와 오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LA로 흔히 알려진 남캘리포니아 지역은 미국 내 두 번째로 인구 밀집도가 높고 고도의 산업화를 이룬 도시로, 일사량이 많고 지형 조건으로 인해 대기 정체가 잘되는 기상조건이어서 전세계에서 스모그가 가장 심한 지역 중 한 곳이다. 1947년 로스엔젤레스 카운티 대기관리국이 설립돼 대기관리 업무를 수행했으나, 기존 지방정부 각각의 노력만으로는 지역 대기환경을 관리하기 힘들다는 인식하에 기존 지방정부별 대기관리 기구를 통합해 1975년 남캘리포니아 대기질관리국(SCAQMD : South Coast Air Quality Management District)을 설립했다. 이 기관은 남캘리포니아 로스엔젤레스 지역의 4개 카운티(Orange, Los Angeles, Riverside, San Bernardino)를 관할한다.

LA, 지방기구 통합한 대기질관리국 설립

대기질관리국은 관할지역의 고정 오염원(점오염원, 면오염원)에 대한 허가 및 대기 오염물질 배출을 관리하며, 연방 정부와 주 법에 따라 운영한다. 대기오염 배출에 대한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관리국 운영예산은 2015년 약 1천600억 원 정도로 그 가운데 약 73%는 평가 수수료, 연간 운영지원비, 배출 수수료, 청문회 비용, 벌금, 투자금 등으로 운영되며 나머지 27%

는 연방정부 보조금, 캘리포니아 대기 자원 보조금, 캘리포니아 청정대기법에 의한 자동차 요금으로 운영된다.

대기질관리국에서 수행한 대기 정책 가운데 이 글에서 설명할 것은 (1)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제(RECLAIM)와 (2)다중 대기독성 노출 연구(MATES)이다. 배출총량제 이름은 REgional CLean Air Incentives Market으로 황산화물(SOx)과 질소산화물(NOx)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배출량을 할당하고, 이를 초과하는 배출량에 대해서는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거래하는 제도다. 1994년부터 시행돼 성공적으로 배출을 저감해 현재는 종료단계다. 노출 연구는 Multiple Air Toxics Exposure Study로 1986년부터 2013년까지 4차례 집중연구를 수행했다. 이 연구의 핵심 내용은 (1)대기 중 유독성 물질 모니터링 및 분석, (2)대기 중 유독성 물질 배출 인벤토리 구축, (3)대기 중 유독성 물질에 대한 모델링 및 위해도 평가다. 이 연구를 통해, 로스엔젤레스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가운데 경유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인체 위해성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확인했고, 이를 저감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 15년 동안 그림 1에서 보듯이 로스엔젤레스 지역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고, 그림 2에서 보듯이 발암 위해도를 고려한 배출량도 70% 가까이 줄어들었다.

우리나라는 2003년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2005년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남캘리포니아 대기질 관리국 조직과 그곳에서 수행한 정책을 참고해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즉 (1)수도권 여러 지방정부를 통합해 대기환경을 관리하는 수도권 대기환경청을 신설해 수도권 대기환경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2)사업장 배출총량제를 실시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배출량을 할당하고, 이를 초과하는 배출량에 대해서는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거래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3)경유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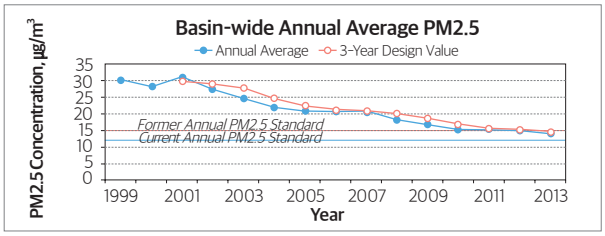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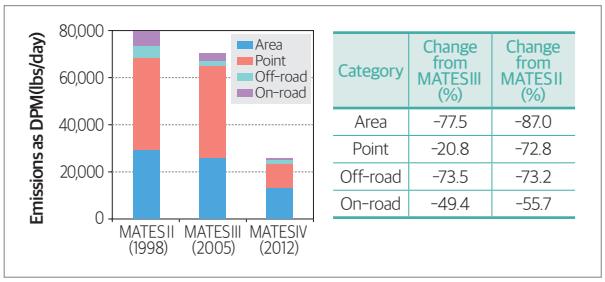


그림 1. 남캘리포니아 로스엔젤레스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 추이. 출처 : SCAQMD, 2016 AQMP White papers, 2015.



Category	Change from MATES III (%)	Change from MATES II (%)
Area	-77.5	-87.0
Point	-20.8	-72.8
Off-road	-73.5	-73.2
On-road	-49.4	-55.7

그림 2. 다중 대기독성 노출 연구(MATES) 기간 추정한 발암위해도를 고려한 배출량 추이. 출처 : SCAQMD, Multiple air toxics exposure study in the South Coast Air Basin, 2015.

동차 관리에 예산의 대부분을 투입해 배출 저감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남캘리포니아 대기질 관리국을 참조해 정책을 수립했으나, 수도권 대기환경청의 예산과 조직 그리고 권한은 그에 미치지 못해, 실질적인 관리 역할을 수행하지는 못하고 있다. 또 사업장 배출 총량제도 사업자에게 배출할당량을 너무 많이 제공해 배출권 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한 예로 2013년 황산화물의 경우 RECLAIM에서의 거래 가격은 182달러/kg 이었으나, 우리나라 수도권은 0.180달러/kg으로 1천 배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실효성이 없게 됐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대기관리 정책은 인체 위해성 평가의 중요성은 계속 인식하고는 있으나, 아직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외국의 좋은 제도와 정책을 참고해 제도나 정책을 수립하더라도, 그 제도나 정책이 우리나라에서 성공하기 위한 적절한 준비 없이는 오히려 정책 신뢰도만 떨어뜨리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

독일의 도심 공기질 개선을 위한 LEZ[1] 운영

황승기
독일 주재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기질 개선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며, 특히 심장과 폐에 직접적인 손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이 각국의 중요한 과제가 됐다.

EU 차원의 환경 보호 대책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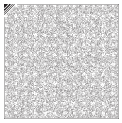
독일의 각종 대기오염 관련 정책은 연방오염방지법(BImSchG)에 따라 운영되는데 이는 EU 각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환경 법규가 반영된 것이다. 즉 유럽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환경 정책이 개별 국가별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EU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규정한 각종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1996년에 제정된 Air Quality Directive 96/62/EC와 3개의 부속 Directive는 각각 공기질 개선을 위한 프레임과 오염물질의 기준을 정했으며, 2008년 Directive 2008/50/EC로 통합돼 현재 EU의 대기오염 통제의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하고 있다. 동 법규에 따른 공기질 관리의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당 이산화질소, 일산화질소, 미세먼지, 이산화황, 벤젠, 납 등 오염물질의 한계값(limit value)을 설정하는 것인데, 이는 WHO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둘째, 오염 정도의 평가(assessment)와 관련된 부분으로 오염물질의 측정을 위한 지역구분, 측정을 위한 측정소(station)의 설치, 측정방법의 표준화 등이다. 셋째, 오염물질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 그 대책으로 공기질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넷째, 이러한 경과를 EU에 보고하고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EU 각국이 국내법으로 전환하도록 의무화했으며, 독일은 연방오염방지법(BImSchG) 및 동법 시행령에서 공기질 개선을 위한 환경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미세먼지 대책으로서 LEZ 운영

독일도 EU의 기준에 따라 지역마다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를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오염물질이 기준치

1) Low Emission Zone



를 초과한 경우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실행 중이다. 예를 들어 입자의 지름이 10㎛ 이하인 미세먼지의 경우 EU에서 정한 연간 평균 기준치는 40㎍/㎥이며, 일평균 기준치는 50㎍/㎥로서 일평균 기준치를 초과한 날이 35일을 넘기면 안 된다. 이러한 기준치를 초과한 많은 독일의 대도시들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부터 개인의 건강과 자연을 보호하기 위한 'Air Quality Plan'을 마련해 시행 중이며 그중 대표적인 것이 'Low Emission Zone(이하 LEZ, 일명 Umweltzone)'의 설치·운영이다.

LEZ는 도심지역 공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차량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해 환경오염이 심각한 도심 지역의 일부 구역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배출 기준에 미달하는 차량의 진입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유럽에서는 1996년 스웨덴에서 최초로 실시됐으며, 독일은 2008년 베를린, 쾰른, 하노버에서 처음 실시돼 2019년 현재 독일 전역에 걸쳐 58개가 운영되고 있다.

차량들은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분류되고 그에 따른 스티커를 발부받는데 독일 대부분의 LEZ는 4그룹에 해당하는 그린스티커 발급 차량의 진입만 허용하고 있다. 디젤 차량은 유로 4, 5, 6 기준에 해당하는 차량만 그린스티커를 발급받을 수 있다. 가솔린 차량의 경우 삼원촉매컨버터(3-way catalytic converter)가 있는 경우 그린스티커가 발부된다. 이러한 기준을 위반해 LEZ 구간을 진입한 경우 벌금으로 80유로가 부과된다. 기준에 미달하는 차량이라 할지라도 공공의 목적이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가 인정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앰뷸런스, 군용차량, 빈티지차량으로 등록된 경우나 중증장애인 등록 차량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한편, 디젤 차량의 경우 미세먼지 저감필터(particulate filter)를 새로 장착한 경우 등급의 상향 조정이 가능하다. 독일연방정부는 이러한 미세먼지 저감필터의 장착을 위해 2006년부터 2013년 5월까지 330유로를, 그 이후부터 2016년까지 260유로를 지원한 바 있다.

시사점

독일이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단기간으로 줄이고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LEZ 등 Air Quality Plan과 관련한 시사점을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미세먼지 등 공기오염물질에 대한 EU의 대책은 모든 해당 국가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 사항이다. 이는 공기의 공공재적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공기질 개선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 주변국과 문제의식의 공유 및 공동 대응방안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대책 수립에 앞선 철저한 사전 분석이다. Directive 2008/50/EC 및 연방오염방지법 시행령은 Air Quality Plan 수립 이전에 초과오염발생(exceedance case)에 대한 분석이 우선하도록 하고 있다. 즉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물질이 발생한 지역의 크기나 도로구간에 대한 조사,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는지, 오염원은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러 오염원이 동시에 관여한 경우는 보다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함은 물론이다. 이러한 철저한 분석이 바탕이 될 때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고 사후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방오염방지법은 Air Quality Plan을 수립하거나 변경함에 있어 한 달 동안 그 계획을 일반에 공개하여 시민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검토해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연방환경청 및 주정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LEZ 운영 등 Air Quality Plan의 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이러한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통해 미세먼지 대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을 것이다.

환경정책, 객관적이고 책임감 있게 검토해야

지현영 사무국장
환경재단

올해 3월 초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2017년 평균보다 무려 6배 높은 150㎍/㎥에 달하면서, 지난 3월 26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상 '사회재난'에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추가됐다. 미세먼지는 국내 요인, 국외 요인, 기상의 3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복잡다단한 환경문제다. 3요소 중 그나마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국내 요인이다. 과거를 회고하다 보면, 국내 요인에 대한 몇 가지 잘못된 정책을 채택하지 않았다면, 2019년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이르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생긴다. 대표적인 두 가지를 지적한다.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히는 경유차

경유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 의해 1군 발암물질로 지정되고,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혀 불과 몇 년 전까지 각광받던 경유차는 애물단지가 됐다. 2005년 이전까지 우리는 디젤에 대한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경유 승용차를 아예 허용하지 않았고, 2009년 정부가 클린디젤이라며 정책적으로 온갖 지원을 해주기 전까지 경유차의 점유율은 자동차 시장의 36%에 불과했다.

작년 11월 공식 폐기한 '클린디젤' 정책을 2009년 애초에 시행하지 않았더라면 경유 승용차가 현재와 같이 2.3배 증가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2005년 정부가 디젤 승용차 허용을 결정하지 않았다면, 경유차의 비중을 30% 미만으로 유지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우리 자동차 산업이 디젤 시장, 레저용 차량(RV)과 같은 큰 차에 초점을 맞추는 동안 이미 전기차 경쟁에서는 미국, 일본의 뒤로 한참 밀려났다. LPG 자동차를 일반인에게 허용했지만, 갈 길은 멀고 대안은 협소하다. SUV 차, 경유 수입차 문화 대신 컴팩트하고 친환경적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문화가 정착되었다면 미세먼지는 현재보다 한결 개선되지 않았을까.

정부 정책에 따라 경유차를 구매한 시민들은 갑자기 환경오염 주범으로 몰리는 것이 불편하고 황당하다. 이에 아직 클린

디젤 폐기는 인센티브 폐지에 이르렀을 뿐 유류세 조정, 경유 승용차 생산금지 등 날카로운 칼을 들이대지 못하고 있다.

또한, 경유 승용차보다 배출 비중이 월등하게 높은 건설기계, 화물자동차에 대한 규제가 미비하다. 이러한 '규제'가 미비한 실정인데, 정부 예산과 정책 우선순위는 전기 수소차 보급과 같은 '지원'에 집중돼 있다. 일단 잘못된 정책임을 인정하고 폐기했다면, 급한 불을 먼저 꺼야 한다.

고형연료제품(SRF : Solid Refuse Fuel)은 기존에 단순 소각 또는 매립하던 폐합성수지, 폐고무, 폐목재 등을 수송성과 저장성, 연소 안정성을 향상해 석탄 열량(4000~5000㎉/㎏)과 유사한 수준으로 자원화한 것이다.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일반고형연료제품(SRF)과 바이오고형연료제품(BIO-SRF)으로 나뉘는데, '녹색성장' 구호에 따라 폐비닐을, 2013년엔 가정 폐비닐뿐 아니라 사업장 폐비닐, 폐타이어, 폐목재까지 SRF로 인정하게 됐다.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됐던 SRF,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돼

그러나 사업장 폐기물의 유해성 우려 때문에 2014년에는 고형연료 환경 기준이 대폭 강화됐고, 2017년 9월부터는 대도시 및 소규모 보일러에는 SRF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그러다 결국 작년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재생에너지 정의에서 일반 SRF 등 비재생 폐기물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제외하게 됐다. 다만 기존 사업자에 대한 신뢰 보호를 위해 예외조항을 달기로 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장려해 생긴 업체들로서는 손바닥 뒤집듯이 달라지는 정부 정책이 난감할 뿐 아니라, 하루아침에 신재생에너지에서 대기오염 배출시설이 돼 주민들과 갈등도 심각하다.

국제 기준에서 쓰레기 폐기물을 원료로 태우는 SRF는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되지 않는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에서도 제외된다. 다만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3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안 중 '액화석유가스(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은 LPG의 자동차 연료 사용 제한을 폐지해 일반인도 제한 없이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SRF를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해 수천억 원의 보조금과 특혜를 제공해왔다.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일까.

사회재난은 자연적 현상에 의해 발생하는 자연재난에 대비되는 인위적 재난이다. 위와 같은 잘못된 정책 판단이 쌓여 만들어진 재난인 셈이다. 그 해결 역시 잘못된 정책을 폐기하고 올바른 정책을 세우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서는 모두가 똑같이 혜택과 피해를 보는 환경문제만큼은 정쟁화하지 않고 객관적이고 책임감 있게 깊이 있는 검토를 해야 한다.

환경문제를 정쟁화할 만큼 현재 상황이 여유 있지 못하다. 미세먼지뿐 아니라 다보스포럼이 3년째 가장 심각한 국제이슈로 꼽고 있는 것이 기후 이변이다. 미세먼지가 불량배라면, 기후변화는 핵폭탄이라는 조천호 국립기상과학원장의 비유처럼, 기후변화 문제는 거대한 재앙이 되어 우리의 목전에서 똬리를 틀고 있다.

시민단체 역시 이제는 사활을 걸고 모니터링해야 한다. 일반 시민 교육 또한 확대해야 한다. 우리 삶에 환경이 미치는 영향이 그 어느 때보다 큰 현시대에 모두가 충분히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숙고해 결정에 참여해야 한다. 하늘에는 국경이 없고, 점점 뜨거워지는 지구 역시 그 누구도 피할 길이 없다.

교육은 미래 디딤돌이자 희망의 사다리

흔히 교육을 말할 때 따라붙는 수식어로 백년대계(百年大計)와 맹모삼천(孟母三遷)이 있다. 교육은 먼 미래를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야 하고, 환경 또한 중요하다는 뜻이 담겨 있다. 전자는 국가가 해야 할 일, 후자는 개인의 영역이기도 하다.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인터뷰를 시작하며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시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가 백년대계를 세운다는 공동의 목표 아래 함께 머리를 맞댄다면 협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교육위원회는 "미래 사회와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를 키우는 정책을 수립하는 만큼 정파를 뛰어넘어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구하겠다"는 말도 더했다. 4월 임시국회 현안부터 들어보았다.

이찬열 교육위원장

"교육위원회 소관 부처인 교육부는 장관이 부총리를 겸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미래 인재양성이라는 중요성 때문입니다. 균형 잡힌 역사관을 함양하는 국사편찬위원회, 국립대와 교육대, 교육청 등 우리 위원회가 맡고 있는 기관들은 우리나라 정신문화를 책임지는 곳이지요. 4월 임시국회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및 '교육시설안전법' 관련 공청회를 열고, 업무보고를 가질 예정입니다. 또한 청원소위와 세 차례의 법안소위를 열어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계류되어 있는 법안들을 다루겠습니다."

이찬열 위원장은 "교육입법은 교육 수요자들의 관심이 크고,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앞으로도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교육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정책 단절의 반복'을 꼽았다.

"교육문제가 정권 교체와 장관 교체에 따라 교육 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특정 정권이나 정파의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을 독립적인 상설 기구가 필요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부와 역할 분담이 명확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중립성, 독립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 미세먼지가 사회적 '재난'으로 떠오르자 지난 '3월 국회'에서 학생들의 건강 대책을 수립한 성과 등을 언급했다.

"국회가 멈추면 민생도 멈춥니다. 여야는 소모적인 갈등과 정쟁을 멈추고, 오직 국민을 위해 달려가야 합니다.

교육위원회는 3월 국회에서 학교에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과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학습에 발생한 입법 공백을 없애기 위해 관련 규정 소급 적용 및 일몰기한 연장을 담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육위원회는 '일본 초등 교과서 검정 시정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이므로,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즉각 포기하고,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위협하는 일체의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교육계에 불어닥친 인구감소, 교육 패러다임의 대전환 필요

우리나라가 직면한 위기 중 하나는 인구감소 문제다. 교육 분야에서 인구 감소는 대학의 구조조정문제 등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위기를 가져왔다. 이찬열 위원장은 '교육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는 교육뿐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인 만큼, 고통 분담과 철저한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폐교대학 종합관리센터'를 설립해 가시화되고 있는 고등교육 구조조정에 따른 문제를 면밀히 파악해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역량평가 등을 통한 대학 구조조정의 칼날에 지방대가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찬열 위원장은 대학 구조개혁평가에 대해 "단순한 정원 감축 등 양적 중심에 치우치는 것은 지양하고,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미래의 생존 방안을 위한 청사진을 그리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 간 소모적인 경쟁 심화 및 대학의 자율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경계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정부정책과 시장논리의 결합이 이뤄져야 대학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이 백년대계이긴 하지만 여야 간에 이견은 있다. 그동안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누리과정 예산 등으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파행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찬열 위원장은 "헌법에 명시된 것처럼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라며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교육문제에서조차 역사교과서 국정화 같은 문제로 진영을 나눠 소모적인 이념논쟁을 벌여서는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리고 교육감 선거에서도 보수 후보니, 진보 후보니 하는 진영논리가 아니라 교육철학과 가치관, 정책과 공약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장 집무실에는 '公明正大(공명정대)'라는 액자가 걸려 있다. 이 위원장은 "공명은 사사로움이 없이 명백한 것이며 정대는 바르고 큼을 뜻하는 만큼 사사로운 이익을 돌보지 않고, 언제나 바르고 정당하게 위원회를 이끌겠다"고 했다. 공직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자 기본적인 자격은 신념과 원칙이라는 말을 덧붙이며 "공직자가 공명정대하면 국민을 실망시킬 일도, 분노하게 할 일도 없다"며 "쉽지 않지만 이 말을 가슴에 새기며 끊임없는 자기성찰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인터뷰를 끝내며 "'소나무와 막걸리 같은 정치인'이라는 평도 있다"고 하자 이 위원장은 호탕하게 웃으며 "막걸리처럼 소탈해 같이 잔을 나누며 삶의 희로애락을 나누고픈 사람, 변함없이 꿋꿋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소나무처럼 한결같은 정치인으로 기억해준다면 더없이 고맙겠다"고 했다. 이어 "교육은 국민들에게는 나보다 내 자식이 더 잘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의 사다리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튼튼한 디딤돌이었던 만큼 더욱 분발하는 교육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글. 김종해

충절이 어우러진 풍요로운 금수강산

김종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6선의 '거물' 정치인을 꺾고 국회에 입성한 김종민 의원. 언론인 출신의 김종민 의원은 청와대 춘추관장과 대변인, 충남 정무부지사를 지낸 뒤 제19대 총선에 출마했다. 상대는 대선 후보를 2번이나 지낸 의원이었다. 김종민 의원은 제19대 총선에서 쓴맛을 본 뒤 제20대 총선에 재도전, 설욕했다. 김종민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를 거쳐 현재 법제사법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다. 김종민 의원과 함께 지역구인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을 둘러보고 그에게 지역 소개와 함께 의정활동 이야기를 들어봤다.

충절과 인삼의 금수강산, 금산

김종민 의원은 지역구 중 가장 먼저 금산으로 취재진을 안내했다. 천지가 온통 푸릇푸릇하고 꽃대궐인 금산은 새 정치, 새 인물에 바라는 기대만큼 새봄의 향기를 물씬 뿜어냈다. 김종민 의원은 지명 '금산(錦山)'은 '금수강산(錦繡江山)'에서 따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종민 의원은 금산 금성면 의총리에 있는 '칠백의총(七百義塚)'을 소개했다. 이곳은 조선 임진왜란 때 왜군과 싸우다가 장렬히 순절한 700의사의 무덤이 있는 곳이다. 1647년 당시 호서·호남지방의 유림들이 이곳에 사당을 건립했고 1663년 현종이 '종용사'라 사액했다. 종용사는 1940년 일제의 항일유적 말살정책에 따라 훼손됐다가 1952년 복원, 1971년 재건립됐다.

종용사에서 참배를 마친 김종민 의원은 "칠백의총은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 조헌 선생과 의승장 영규 대사가 이끄는 700여 명의 의병이 1만 5천 명의 왜적과 싸우다 모두 순절하자 조헌 선생의 제자인 박정량, 전승업 등이 그분들의 유해를 거둬 만든 무덤이다. 봉급을 받

금산 금성면 칠백의총 종용사에서

고 살던 관군과 달리 자체적으로 일어난 의병들이 목숨을 걸고 싸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칠백의총을 둘러본 뒤 김종민 의원은 금산수삼센터를 찾았다. 수삼은 말리지 않은 인삼을 말한다. 김종민 의원은 수삼센터 상인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요즘 판매량은 어떤지 친근하게 대화를 이어나갔다.

김종민 의원은 "금산 인삼은 고려인삼의 종주지답게 다른 지역 인삼보다 사포닌 성분이 많다고 한다. 해마다 10월 초에 금산 인삼축제가 열리는데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전국 최우수 축제에 10회 선정된 대한민국 대표축제"라고 소개했다.

금산에는 인삼뿐만 아니라 '추부깻잎'도 있다. 충남 최고봉인 서대산 인근 청정지역에서 생산되는 추부깻잎은 잎이 두껍고 색이 예쁘며 향기가 독특해 명품 깻잎으로 인정받고 있다.

천하 명당 군사 요충지, 계룡

'군사도시' 계룡시는 일찍부터 천하 명당이었다. 계룡신도안은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고 이곳을 도읍지로 삼으려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성계는 '도참설(음양오행설에 의해 길흉화복을 예언하던 학설)'로 왕궁을 짓는 공사를 그만두고 지금의 서울로 옮겨갔다. 그 때 도읍지 공사가 진행됐음을 입증하는 왕궁 초석 105개가 지금도 곳곳에 남아 있다.

계룡시는 1990년대 초반 계룡대(육·해·공 3군본부) 이전 사업으로 대규모 군대 시설이 들어서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군사 요충지로 거듭났다. 현재 '2020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를 앞두고 있어 군 문화의 메카로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다.

먹거리, 관광자원 풍부한 논산

논산은 산과 너른 평야, 바다와 만나는 강이 있어 예부터 풍요로운 땅이었다. 이곳을 차지하기 위해 삼국시대 백제 계백 장군과 신라 김유신 장군은 황산벌(논산시 연산면 일대 벌판) 전투에서 맞붙었다.

비옥한 지역이다 보니 특산물도 많다. 전국 제일 젓갈의 명성을 유지하는 강경 젓갈은 2004년부터 국가지정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돼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으며, 전국

금산수삼센터 상인과 악수하는 김종민 의원

논산 화지시장

논산 탑정호 앞에서

최대의 생산량을 자랑하는 논산 딸기는 맛과 향이 독특한 무공해 딸기로 전국 생산량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김종민 의원은 "논산은 먹거리뿐 아니라 관광자원도 뛰어나다. 논산에서 가볼 만한 곳은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국보 제323호, 은진미륵)으로 이름난 관촉사와 대둔산의 물줄기를 담고 있는 탑정호를 꼽을 수 있다. 높이가 18m인 동양 최대의 석조불상인 은진미륵은 지난해 55년 만에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됐다. 논산시 한가운데 자리한 탑정호는 산과 강, 들을 품어 최대 3천만 톤의 담수를 저장할 수 있고 물이 맑고 깨끗해 수상 레포츠와 산책의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을 모두 둘러본 김종민 의원은 "금산은 인삼과 연계한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계룡은 국방단지와 관련 연구단지 조성, 논산도 육군훈련소 등을 계룡의 국방단지와 연계해 관광산업을 더욱 키울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개혁 핵심은 법안소위 활성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종민 의원이 가장 추진하고 싶은 일은 정치개혁이다. 김종민 의원은 "국회에 들어와 보니 정치개혁의 핵심은 법안소위를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민 의원은 "현재 국회의원들이 정작 자신들의 할 일보다 지역구 관리에 더 힘을 쓰고 있다. 의원들은 본연의 역할인 입법활동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비율이 지금은 5 대 1인데 이를 2 대 1로 조정하자고 하는 것이 바로 법안소위 활성화를 위한 장치다. 지역구 활동을 하지 않는 30%의 비례의원이 법안소위 하자고 하면 명분상 회의를 열지 않을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평소 '민심은 천심'이라는 말을 늘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정치개혁'에 사명감을 갖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치인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 **글.** 고영선 **사진.** 유윤기

최도자 의원

복지 사각지대 없애는 보건의료 전문가

전혜숙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지난달 국회보 '칭찬합시다'의 주인공이었던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은 다음 주자로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구갑)을 추천했다. 최도자 의원은 전혜숙 의원에 대해 "약사 출신이시라 그런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질의하실 때 보면 정확하게 핵심을 찌른다. 그러면서도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할 줄 아는 겸손한 분"이라고 칭찬했다. 또 "한결같고 변함없는 분"이라며 "꾸미지 않은 진정성이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의원"이라고 말했다.

전혜숙 의원은 최도자 의원의 칭찬에 대해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활동뿐 아니라 과거 2017~2018년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활동까지 그간 의정활동에서 교류가 잦았던 분이다. 자주 뵙다 보니 제 흠을 보셨을 법도 한데, 과분한 칭찬을 해주셨다"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경북약사회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감사 등 보건의료 전문가로서 풍부한 이력을 지닌 전혜숙 의원은 제18대·20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으로 선출됐다. 전혜숙 의원은 "정치든 법이든 국민들 피부에 직접 닿는 '실질적인'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나라는 경제가 굉장히 발전한 것에 비해 복지서비스는 많이 부족하다. 소외된 사람이 없는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전혜숙 의원은 복지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는 법 개정안 마련에 많은 공을 들여왔다며 몇 가지 법안을 소개했다.

"제도권에 쉽게 목소리 내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 보호"

전혜숙 의원은 제20대국회에 들어와서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30만 원이 지급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1호로 제출했으며, 6세 미만 아동 전체에 아동수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법안심사 과정에서 25만 원으로 삭감되어 통과됐고, 아동복지법의 경우 처음엔 차등지급으로 수정됐지만 지속적으로 보편적 아동수당을 강조했다"면서 "결과적으로 제 의견대로 재개정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혜숙 의원은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의 본인부담금 경감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2018년 법이 통과되어 본인부담금을 60% 범위 내에서 차등 경감할 수 있게 됐다"며 "'치매국가책임제'로 가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노인 상대적 빈곤율이 43.7%로 1위입니다. 우리 노인 분들은 과거에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고, 돈을 벌면 자식 교육에 다 쓰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이젠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죠. 개정안 발의 당시 반대 여론도 많았지만, 법 개정의 영향으로 많은 가정에 불화가 없어졌다는 말을 들을 때면 상당히 큰 보람을 느낍니다."

전혜숙 의원은 제20대국회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현재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도 함께 맡고 있다. 그렇다 보니 의료법, 약사법 등 보건의료분야에서의 전문적인 발의부터 미투(Me Too) 관련 법안까지 폭넓은 입법 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요양병원에 계시는 노인, 발달장애인, 자살자 유가족, 파양된 아동, 노숙자분들과 같이 제도권을 향해 쉽게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연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명수 의원을 칭찬합니다

전혜숙 의원은 다음 칭찬 주자로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아산시갑)을 추천했다. 이명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에 대해 전혜숙 의원은 "물 흐르는 듯한 회의 진행은 물론, 여야 위원님들 모두에 대한 존중과 포용이 빛나는 뛰어난 인품의 소유자"로 소개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아동수당, 국민연금 등 정치적으로 쟁점이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원만하게 상임위원회가 작동하고 있는 것은 모두 이명수 위원장 덕분입니다. 또, 충청남도 기획담당관, 충남 금산군수, 청와대 행정관, 행정안전부(당시 내무부) 기획관리실을 거쳐 충남도청 행정부지사까지 역임하신 대한민국 최고의 행정 전문가입니다. 예리한 판단력과 유연함을 함께 가지고 계신, 그런 국회의원입니다."

글. 서기정 **사진.** 임진완

서른, 잔치는 끝났다

최 영 미

물론 나는 알고 있다
내가 운동보다도 운동가를
술보다도 술 마시는 분위기를 더 좋아했다는 걸
그리고 외로울 땐 동지여!로 시작하는 투쟁가가 아니라
낮은 목소리로 사랑 노래를 즐겼다는 걸
그러나 대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잔치는 끝났다
술 떨어지고, 사람들은 하나둘 지갑을 챙기고
마침내 그도 갔지만
마지막 셈을 마치고 제각기 신발을 찾아 신고 떠났지만
어렴풋이 나는 알고 있다
여기 홀로 누군가 마지막까지 남아
주인 대신 상을 치우고
뜨거운 눈물 흘리리란 걸
그가 부르다 만 노래를 마저 고쳐 부르리란 걸
어쩌면 나는 알고 있다
누군가 그 대신 상을 차리고, 새벽이 오기 전에
다시 사람들을 불러 모으리라
환하게 불 밝히고 무대를 다시 꾸미리라

그러나 대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최 영 미

1961년 서울생. 서울대 서양사학과와 홍익대 대학원 미술사학과를 졸업했다. 1992년 창작과비평 겨울호에 '속초에서' 외 7편의 시를 발표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1994년 첫 시집 '서른, 잔치는 끝났다'를 출간했고 베스트셀러가 됐다. 저서로는 시집 '꿈의 페달을 밟고', '돼지들에게', '도착하지 않은 삶' 등이 있으며 장편소설 '흉터와 무늬' 와 산문집 '길을 잃어야 진짜 여행이다' 등 다수가 있다. 이수문학상을 수상했다.

삶이란 늘 잔치가 시작되고, 끝나는 것

채이배 의원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96년 대학 4학년, 최영미 시집 '서른, 잔치는 끝났다'를 읽었다. 학생운동의 끄트머리에 있던 나는 3년간의 동아리 활동을 마치고, 사회진출을 준비하고 있었다. 치열했던 3년의 동아리 활동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뭘 해 먹고 살까"라는 개인적 삶을 고민하던 시기였다. 하지만 여전히 스물두 살 팔팔 끓어오르는 피를 주체하지 못하던 시절이었다.

그 때 만난 '서른, 잔치는 끝났다'는 패배를 인정하는, 또는 청춘을 바친 운동을 외면하는 식은 피 같은 시였다. 하지만, 당시 내 피는 이 시로 식을 만큼 식지 않아 있었다. 시집을 한 번 읽었을 때는 기분이 언짢았다. 또 한 번 읽으니 언짢은 기분은 사라지고 묘한 기분이 들었다. 몇 차례 읽다 보니 작가의 시에 대구가 되는 시를 쓰기 시작했다. 일종의 반론 제기.

어떤 시는 반론이 있었고 어떤 시는 없었다. 반론이 있는 시에 대해 대구 시를 지어 책갈피에 꽂아 두었다. 그리고 96년 늦게 공인회계사 시험공부를 시작했다. 시험공부를 하면서 '내가 왜 시험을 준비하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면, 시집을 꺼내 읽었다. 작가의 시와 내 시를 읽으며 잡념을 떨치곤 했다.

대학이라는 새로운 세상에서 만든 가치관은 지금도 내 삶의 길잡이를 하고 있다. 벌써 20년이 지난 것이지만, 여전히 스물, 서른이란 나이와 상관없이 항상 잔치는 시작되고, 잔치는 끝나고 있다. 부끄럽지만 스물두 살 피가 끓을 때 지은 대구 시의 기억을 끄집어내본다.

스물, 잔치는 시작됐다

나는 새로운 세상에 들어왔다
짜여있지 않은 시간표 속에서 자유를 만끽하고
무심코 걷고 있는 길이 도로 한복판이고
동지들과 밤새 술을 마시고,
철거민과 밤새 집을 지키고
농민, 노동자, 억울한 자들과 나란히 서 있다.

잔치는 시작됐다
새로운 만남, 동지, 투쟁, 가슴앓이
마냥 좋기만 하다가도 힘들어 주저앉기도 한다
혹시 나 혼자 남는 것은 아닌지 걱정도 한다
어렴풋이 나는 알고 있다
다들 떠날 것이라는 걸
지금 이 자리가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우리가 부르던 노래는 누군가 이어 부를 것이고
우리가 있던 자리를 누군가 채울 것이다
그 누군가가 내 노래를, 내 자리를 지우지 않길
나는 누군가를 불러 모으고, 밤새 얘기한다

그리고, 나는 그리 멀리 가지 않을 것이다

서른, 잔치를 끝내기 위해 스물, 잔치를 시작한다

열혈 청년에서 민생 정치인으로 뛰다

이진복 의원(자유한국당, 부산 동래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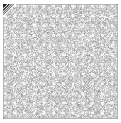
4월이 꽃들의 축제였다면 5월은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이 주인공이다. 어린이·어버이날, 입양의 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등 달력을 빼곡히 메운 기념일들은 우리와 소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의 날들이다.

3선의 국회의원으로 정무위원장을 지낸 이진복 의원은 6·25전쟁 직후 태어난 베이비부머 세대다. 전쟁의 폐허에서 5남2녀 중 셋째로 태어난 이진복 의원은 "그 시절은 모두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않았다"며 그때를 회상했다.

"선친께서 철도공무원이었어요. 형제들이 많다 보니 항상 쪼들린 살림살이였는데 빚 보증을 잘못 서 가세가 기울었고, 중학교 시절에는 학비를 손수 벌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지나고 보니 고난은 나를 단련시킨 과정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삼형제는 축구를 좋아했다. 부친께서는 아주 엄한 분이었지만 축구시합이 있던 어느 날 도시락을 싸와 감동을 받았다고 했다. 아들들과 목욕탕에 함께 가면 등을 빡빡 밀어주고 짜장면을 사주던 기억을 떠올리며 "살갑게 표현하는 분은 아니었지만 마음은 따뜻한 분"이라고 했다. 어머니에 대한 추억은 동래구청장 선거에 출마했을 때의 일화로 대신했다.

"후보 시절 나도 모르게 열심히 돕는 분이 있어 만나봤더니 그분께서 '후보님 어머니께서 제가 어려워 끼니를 거를 때 나 몰래 여러 번 쌀을 대문 앞에 두고 간 분'이라며 '그때 진 빚을



갚는다'고 하더군요. 세상 모든 어머니들이 다 그러하겠지만 자식은 부모님 은공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이진복 의원이 처음부터 정치를 해야겠다는 거창한 꿈을 가졌던 것은 아니었다. 엄혹했던 유신시절이 끝나고 1980년 정치적 해빙기를 맞았다. 곧이어 1980년 신군부에 의해 '서울의 봄'은 무산됐고 제11대국회 총선이 치러졌다. 정치와의 인연은 예기치 않게 찾아왔다.

"1980년 겨울, 신군부의 서슬 퍼런 총칼이 대한민국을 장악하던 때였습니다. 일본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데 출마를 앞둔 박관용 전 국회의장이 '같이 일해보자'고 하더군요. 그 당시는 야당 후보 선거 운동원이 명함만 돌려도 경찰이 잡아갔습니다. 상대방은 돈 봉투를 돌려도 괜찮고 야당 후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요. 야당 후보를 돕는다는 것은 선거운동 그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이렇게 박관용 전 의장과 인연을 맺은 이 의원은 박 의장을 '인생과 정치의 참스승'으로 삼아 박 전 의장이 정계은퇴할 때까지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박 전 의장 역시 이진복 의원을 "내 동생 같은, 내 분신 같은 친구다. 1981년 야당이란 탄압과 고난을 무릅쓰고 평생 동지의 길을 선택해준 고마운 동지"라고 했다.

하지만 박관용 의장의 후광으로 정치를 편하게 한 것은 아니다. 2002년 지방선거 때 동래구청장 후보로 하향식 '낙점'이 된 것이 아니라 치열한 경선을 거쳤다. 경선과정을 통해 정치적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우려는 박 전 의장의 심모원려(深謀遠慮)가 담겨 있었던 것이다.

세금과 세비가 아깝지 않은 서민정치의 길 걸을 터

예로부터 동래는 부산과 경남을 아우르는 역사와 문화, 교통의 중심지였다. 부산 해운대구와 금정구, 연제구가 모두 동래구에서 분구되었으니 '부산의 동래가 아니라 동래의 부산'이라고 할 정도로 역사가 깊은 지역이다. 재래시장도 12개나 있다. '운동화 구청장'이란 별명으로 통했던 동래구청장 시절을 얘기했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구청장은 말이 아니라 골목길은 물론 하수구 위치까지 손바닥 보듯 해야 합니다. 현장을 저보다 많이 아는 구청 공무원이 없다고 할 정도로 발로 뛰는 구청장이었지요. 기억에 남는 일이라면 도심을 가로지르는 온천천을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바꾼 것입니다."

도시개발과 하천복개로 죽은 하천이 된 온천천을 되살린다는 것은 예산 투입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하천 가꾸기 시민 공모제와 시민 대토론회 등으로 서로 다른 입장을 존중하고 조율하면서 진행했다. 온천천이 살아나자 시민들은 "내가 낸 세금이 하나도 아깝지 않다"고 했다며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다고 했다.

구청장을 거쳐 제18대국회에 첫 등원한 이진복 의원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카드수수료 인하를 이끌어낸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발의였다.

"중소자영업자에 대한 카드수수료가 대형가맹점에 비해 높아 서민부담이 큰데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이 관심을 갖지 않더군요. 법개정을 통해 4%에 육박하던 중소상공인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대형가맹점 수준인 2% 이하로 인하했습니다. 소외되거나 지나치기 쉬운 민생을 살피고 대변하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 아닌가 합니다."

이진복 의원은 우리 경제의 화두인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성공의 성패는 금융혁신에 달려 있다"며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이 혁신이라는 명제에 걸맞게 개선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다"고 개혁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정부의 규제개혁과 기업의 변화를 꼽았다. 최근에는 자유한국당 상임특보단장을 맡아 다음 총선 준비와 수권정당으로서의 채비 갖추기에 나선 이진복 의원은 "세금이 아깝지 않은 정치, 세비 값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글. 김종해 **사진.** 임진완

학교 미세먼지 해결·지방자치법 개정 등 토론회 열려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참여 후 첫 주주총회 무엇이 달라졌나?’ 토론회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월 2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공동으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참여 후 첫 주주총회 무엇이 달라졌나?’라는 주제로 연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평가와 전망 토론회를 열었다.

스튜어드십코드(stewardship code : 수탁자책임 원칙)는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자율 지침으로, 국민연금은 2018년 7월 처음 도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스튜어드십코드 시행의 긍정적 효과를 위해선 국민연금 의사결정 과정의 독립성 강화가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수탁자책임위원회에 대한 개선 방향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박경서 고려대 경영학부 교수는 “현재 수탁자책임위원회는 비상근 전문가로 구성돼 있어 주총안건 통지가 이뤄진 후 단기간 내 충분한 논의가 어렵고, 어떤 안건을 논의할지에 대한 판단을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실에 의존하는 상황”이라며 “비상근 위주의 위원 구성은 정부 또는 여타 이해관계자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선책임을 감안하더라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진영 연세대 경영대 교수는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은 향후 개선 여지가 많다”면서 “공적연금이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위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최영민 국민연금연구원 기금정책팀장은 “현재 국민연금의 의사결정 구조 개선 노력은 진행형이다”며 “충분한 시간을 두고 관련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 포트폴리오 내 국내주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ICT 활용 감염병 대응방안’ 국제포럼

전혜숙·기동민·박경미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김세연 의원(자유한국당),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4월 3일 ‘ICT 활용 감염병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2018년 2차 메르스 사태 당시 KT와 질병관리본부의 ‘로밍 데이터를 활용한 감염병 대응 시스템’을 활용해 빠르게 종식된 경험을 토대로,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 정보통신기술)를 통한 감염병 대응 시스템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변형균 KT 빅데이터사업지원단 상무는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에는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가 사람의 기억에만 의존하다 보니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반면, 2018년 2차 메르스 사태 때에는 모바일 데이터를 활용해 동선을 확보하며 확진자가 1명에 그쳤다”며 “앞으로는 어느 국가·지역에서 어떤 감염병이 발생했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선규 질병관리본부 위기분석국제협력과장은 “단순히 출국했던 국민이 국내에 들어온 후를 예측하는 것뿐 아니라, 전주기에 있어 감염병을 예방하고 관련 정보를 주기 위해 정책방향을 바꾸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감염병 대응 시스템 발전 계획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현실적 어려움과 극복방향을 제시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국제적인 데이터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아프리카 등 보건환경이 취약한 국가의 보건부 홈페이지는 감염병 자료 업데이트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 감염병 정보 전달·공유를 위해 ICT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학교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토론회’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4월 3일 ‘학교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학교용 공기청정기의 미세먼지 제거능력에 대한 실질적 연구와 향후 학교 미세먼지 관리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한방우 한국기계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초등학교에 보급된 공기청정기의 미세먼지 저감 실증결과 발표를 통해 “공기정화장치 사용 시 초미세먼지를 63~64%, 미세먼지를 54~61%까지 저감할 수 있

다. 다만 이는 학교 공기정화장치 사용기준인 교실 크기 대비 1.5배 용량 1대를 사용했을 때의 결과이며, 공기청정기를 잘 관리했을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이다"라고 설명했다.

정권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학교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실내 공간의 관리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은 생활의 90% 이상을 실내에서 생활하고 있어, 실내 공간 위주로 관리를 해야 한다"면서 "최근 열교환기 청정필터 및 창문형 필터 개발 등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내부는 과학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교육을 통해 유지관리만 철저히 하면 내부 미세먼지는 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준석 한양대 건축공학부 교수는 "교실 내 공기청정기 설치만으론 해결이 불가능하다. 건물이 기밀해야만 공기청정기나 환기장치가 효과를 본다"며 "1차적으로 환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할 수 있는 제도 방안 검토가 먼저 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시간 기상 알림서비스(Push App) 개발 방향 설정'을 위한 포럼

인재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김학용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4월 8일 '실시간 기상 알림서비스(Push App)의 개발 방향 설정'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기상청이 함께 주관해, 재난·공공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기상청이 개발 중인 실시간 기상 알림서비스 앱의 개발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정관영 기상청 예보정책과장은 "2018년 8월 수도권 집중호우, 2019년 3월 당진 용오름, 2019년 3월 고창 돌풍 등 최근 예보가 불가능한 위험기상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기상청은 국민이 위치기반 실시간 알림(Push) 서비스를 통해 위험기상을 신속하게 전달받아 사고를 방지하고자 한다"고 개발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그는 기상청 예보관이 갑작스러운 위험기상을 인지했음에도 경보발표와 국민들에게 전달되기까지의 시간이 지체된 사례를 소개하며, 인지되는 순간 바로 해당 지역에 소식을 알릴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항진 SBS 문화과학부 선임기자는 "쉽게 이해한 뒤 바로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서비스가 돼야 한다"면서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는 것은 물론 이해하기 쉽도록 색상이나 그림이 직관적이어야 하고, 사고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정보나 행동요령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조성억 한국기상산업협회장은 “신속성과 정확성은 동시에 충족하기 어렵다. 위험기상은 정확성보다는 신속성을 추구하는 서비스이므로 정확하지 않은 정보에 대한 관용이 필요하다”며 “공공은 위험기상 서비스, 민간은 산업기상 서비스에 집중하되 기상청은 관측 데이터가 생성되면 가공·분석이 가능한 방식으로 즉시 민간과 공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토론회’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병국 의원(바른미래당),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4월 12일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토론회 -정책지원 전문 인력 확보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 3월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법안 통과와 함께 지방의회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및 인사권 독립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 다양화, 부단체장 추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시도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장에게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고경훈 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의회 사무처 인력의 인사권을 단체장이 가지고 있어, 지방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방의원은 전속된 보좌인력이 없다. 지방의회 사무기구에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의원은 인턴을 포함해 최대 9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는 반면, 지방의원은 유급 보좌인력이 전무하다.

최봉석 동국대 법학과 교수 역시 “전문인력 도입은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장치가 될 것”이라며 “다만 전문인력의 신분, 역할, 활용 방안 등을 법적으로 치밀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보다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국회법 수준의 지방의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정태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단장은 “개정안에는 진일보한 규정도 있지만, 지방의회의 가장 핵심 기능인 자치입법권은 여전히 제한돼 있다”며 “별도의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이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글. 서기정

건축물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제도적 유지·관리 체계 마련

'건축물관리법' 제정

장대섭 수석전문위원
국토교통위원회

최근 건축물과 관련한 연이은 대형 안전사고 발생으로 기존 건축물의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특히,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사고(29명 사망, 2017. 12.), 밀양세종병원 화재사고(47명 사망, 2018. 1.), 종로 여관(6명 사망, 2018. 1.) 및 고시원(7명 사망, 2018. 11.) 화재사고 등 오래된 건축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대형 참사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저성장 등 경제·사회 환경변화 및 건축기술 발전 등으로 건축물의 수명주기가 늘어남에 따라, 기존 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는 사회적 변화를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높아진 것이다. 이에 따라 국회는 안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물관리법안'과 노웅래·송영길·김석기·안호영·민경욱·김병기·정유섭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의해, 지난 2019년 4월 5일 제367회국회(임시회) 제10차 본회의에서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보강,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 등 건축물의 유지·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안'을 의결했다.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 개선을 위한 의무 신설

제정안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리·쾌적·기능 등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건축물을 전 생애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제정안에서는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첫째, 의료시설·교육연구시설·노유자시설 등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의 유형을 정하고 해당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의무화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는 신설되는 의무의 소급입법으로 인한 위헌성 문제를 최소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의무의 적용범위를 3층 이상 건축물로 제한하고 연면적·용도·마감재료 등을 명시적으로 정하도록 해, 화재안전 성능보강 의무가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신설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화재안전 성능보강의 절차를 마련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신설했다. 건축물의 관리자는 화재안전 성능보강 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보강공사를 완료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공중의 위험을 초래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셋째,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지원하기 위한 특례를 신설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화재안전 성능보강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을 보조·융자하도록 하고, 보강을 완료한 경우 재산세·취득세를 감면하며, 화재안전 성능보강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또한 제정안에서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를 신설하고 있다.

첫째, 건축물 노후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축물 해체공사에 허가제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는 허가제의 점진적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이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 높이 20m 이상, 6층 이상인 건축물 등을 해체할 경우에 허가를 받도록 기준을 조정했다.

둘째, 건축물 관리계획을 세우도록 의무화하고, 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체계화했다.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건축물 관리계획을 수립·제출하고, 동 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유지·보수해야 한다. 또한 건축물의 점검을 필요성·긴급성·전문성에 따라 정기·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 안전진단으로 구분했다.

셋째, 건축물 관리와 관련해 각 부처 및 기관별로 분산된 관리이력과 점검결과 정보를 통합하기 위해 생애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건축물관리 정책과 기술을 연구·개발 및 보급하기 위해 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하며, 빈 건축물 정비의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기대효과 및 향후 과제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사용승인 이후부터 해체까지 건축물의 전 생애에 걸쳐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그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도 화재안전 성능보강이 시행되고 건축물에 대한 적시성 있는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도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도입되는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건축물 관리계획을 포함한 건축물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술적·재정적 실현가능성을 고려한 화재안전 성능보강 공사의 구체적인 기준, 보강공사를 지원하기 위한 적정한 수준의 재원확보 방안 등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몰카’ 등 불법촬영물 삭제, 국가가 지원한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9. 14.)

지난 3월 숙박업소 객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투숙객들을 촬영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중계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3개월 동안 10개 도시에 있는 30개 숙박업소에 무선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를 설치하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투숙객들의 사생활을 실시간으로 중계했다.
이들이 촬영한 투숙객만도 1천600여 명에 달한다. 범행에 이용된 카메라는 렌즈 크기가 1㎜에 불과한 초소형이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최근 스마트폰 보급과 카메라 초소형화 추세와 맞물려 ‘몰카’(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 영상물 유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불법촬영 영상물은 인터넷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빠르게 전파되지만 문제 해결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개인적 대응이 쉽지 않다. 이에 국회는 지난 2018년 2월 20일 본회의에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성폭력방지법)을 의결했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성폭력방지법에 대해 들어봤다.

개정된 성폭력방지법은 국가가 불법촬영 영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돼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촬영물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박성혜 삭제지원팀 팀장은 “피해 사진 및 영상이 확보되고 유포가 확인되는 경우 삭제 지원이 시작된다”고 소개했다.

지난 2018년 4월 개소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홈페이지(www.women1366.kr/stopds)나 전화(02-735-8994)를 통해 ‘몰카’나 ‘몸캠 피싱’(채팅 시 음란행위를 유도한 후 동영상 유포를 협박하는 것)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법 시행 이후 3만 900여 건의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삭제지원팀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대리해 웹하드, 성인사이트 등의 플랫폼 운영자에게 유포된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요청하며 운영

지난 3월 경찰청 사이버수사 관계자가 숙박업소 객실에 설치된 초소형 몰래 카메라를 공개하고 있는 장면.

자가 삭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페이지 및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있다.

박성혜 팀장은 "센터 개소 이후 지난 3월 말까지 4만2천527건의 불법촬영물 삭제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9월 성폭력방지법 시행 이후 올해 3월 31일까지 3만 898건의 불법촬영물 삭제를 지원했다. 하루 평균 241건에 달한다.

또, 개정된 성폭력방지법은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가해자(성폭력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 국가가 먼저 촬영물 삭제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측은 "법 시행 이후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는 아직 없다"고 밝혔다. 법 개정을 통해 구상권 청구 근거가 마련되면서 최근 여성가족부는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인력의 근로시간 등을 토대로 '불법촬영물 구상권 비용 산정 방식'을 확정한 상태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요청이 있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포된 불법촬영물 채증 등 경찰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 상담지원팀에서는 피해자들에 대한 상담도 지원한다. 상담은 불법촬영물 유포가 확실하게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가능하다. 지원센터는 그 밖에도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지원, 의료지원을 비롯해 피해자들을 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 쉼터 등에 연계하는 일도 하고 있다. 최초 피해 접수부터 삭제 지원, 법률·의료·쉼터 연계까지 피해자를 지원하는 '원스톱 센터' 역할을 하는 셈이다.

박성혜 팀장은 "불법촬영물이 유포되는 사이트는 서버가 해외에 있고 실명 인증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증거확보 등 수사가 어려운 상황이라 국제 공조가 절실하다"며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이 더 무거워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팀장은 "일선 수사기관의 인식과 태도도 바뀌어야 한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신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대중의 인식 개선을 강조했다. 불법촬영물을 시청하고 공유하는 것 역시 범죄를 조장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글. 박민선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을 강화합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19년 3월 27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2019년 3월 28일 본회의 의결

※ 법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회 홈페이지 www.assembly.go.kr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구성.** 이진택

국회,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및 강원도 산불 복구지원 현안보고 청취

법제사법위, 문형배 헌법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는 4월 9일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자질과 도덕성 등을 검증했다. 문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사형제 존폐에 관한 입장이 무엇이냐는 박지원 위원(민주평화당)의 질문에 대해 "입법론적으로 사형제는 폐지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문 후보자는 낙태죄 위헌여부와 관련해서는 "입법적으로 산모의 자기결정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자는 동성애에 대해서는 "찬반 영역에 속하지 않는 문제"라며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동성혼에 대해서는 "(혼인과 가족관계를 규정한) 헌법 36조 1항에 의해 동성혼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동성혼은 현 단계에서 반대입장"이라고 밝혔다. 군대 내 동성애 처벌에 대해서도 "처벌이 합헌이라고 판단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합헌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청문회에서는 문 후보자의 공보관실 운영비 사용 논란이 쟁점이 됐다. 문 후보자가 부산가정법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법원 소속 서무행정관을 통해 9차례에 걸쳐 현금 95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김도읍 위원(자유한국당)은 "공보관실 운영비 사용 의혹은 수사 대상"이라며 "지급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해 현금을 전달받았다. 허위공문서 작성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후보자는 이에 대해 "포괄적인 책임은 있지만, 법원장이 실무적인 업무를 할 수는 없었다. 감사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가정법원 예산은 늘 모자라 사비로 100만 원을 낸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자가 우리법연구회장을 맡은 사실도 논란이 됐다. 문 후보자는 "헌법과 형법을 연구하는 학술연구단체라고 생각하고 우리법연구회에 들어갔다"며 "기수에 따라 선배가 회장을 맡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해 회장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후보자 자

신에 대해 진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 사회에 보수와 진보의 잣대가 설정돼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문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서 큰 하자가 없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여상규 위원장은 "편향된 판결은 보이지 않는다.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고, 오신환 위원(바른미래당)은 "도덕성이나 재산형성 과정 등에 대해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위, 강원도 지역 산불피해현황 및 복구지원 관련 현안보고 청취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인재근)는 4월 9일 행정안전부 장관과 소방청장 등으로부터 '강원도 지역 산불피해현황 및 복구지원' 관련 현안보고를 청취하고, 향후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현안보고에서는 사고 원인 및 초기 대응과 관련, 초기 재난대응체계의 보다 신속한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 재난주관방송의 재난 대응 미흡 문제, 한국전력의 책임 문제 등이 거론됐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이날 홍익표 위원(더불어민주당)이 "소방업무의 국가 책임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제껏 소방업무 중 상당 부분이 국가사무인데도 지방소방인력이 99%고 지방예산이 95%라 국가에서 사실상 방치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이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도 이렇게 힘든데 소방사무의 국가사무화는 더욱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방인력 및 장비 확충과 관련, 강풍대응이 가능한 전천후 소방헬기 확보 등 장비의 확충·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 집중적으로 지적됐다. 정 청장은 현장 장비 부실 문제에 대해 "소방안전교부세가 교부되면서 많이 개선됐지만 아직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소방 인력·장비 확충 필요성은 다 느끼지만, 지방재정 자립도가 낮은 시·도에서는 상대적으로 우선순위를 낮게 가져간다"며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통해 인건비를 국가에서 대주면 증원이 훨씬 더 수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방헬기 교체 계획과 관련해 "국가에서 지원해 계속 노후 소방헬기 교체 작업을 하고 있다"며 "2023년까지 8대 교체를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정 청장은 산불 진화를 산림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데 대해 "육상재난 총괄 기관인 소방청에서 (담당)하는 것도 심도있게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진영 행정안전

부 장관은 “산불 진화는 산림청이 워낙 특화돼 있고 그동안도 잘 해왔기에 과거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산림청이 담당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 같다. 소방청과 역할분담, 협력이 잘 되고 있다”고 밝혔다.

법제사법위, 이미선 헌법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는 4월 10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자질과 도덕성 등을 검증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후보자와 배우자의 과다한 주식 보유 논란이 쟁점이 됐다.

이 후보자 부부는 전체 재산 42억6천여만 원 가운데 80%가 넘는 35억5천여만 원 상당을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재산 대부분을 주식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어서 일부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돼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재판 업무에 매진하면서 재산문제를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맡겼다. 배우자가 홈트레이딩으로 거래했다. 종목·수량 선정은 모두 배우자가 했다. 주식거래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1년에 한 번 재산신고할 때만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또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조건 없이 주식을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장제원 위원(자유한국당)은 “2004년 2억9천만 원 재산이 2019년에 46억 원이 됐다”며 “수익률을 보면 메지온 287.22%, 한국기업평가 47.93%, 한국카본 47.20%, 삼진제약 43.61% 등이다. 주식의 신이다”라고 지적했다. 여상규 위원장은 “후보자 머릿속이 주식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 있을 텐데 어떻게 재판 업무를 하나”라면서 “대법원 윤리강령을 보면 법관은 재판의 공정성 관련 의심을 초래하거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경우 경제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당 일부 위원들도 이 후보자의 주식 보유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백혜련 위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점이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특히 이 후보자 부부가 보유하고 있는 OCI그룹 계열사 주식이 논란이 됐다. 이 후보자 부부는 OCI그룹 계열사 이테크건설 주식을 17억4천여만 원, OCI그룹 계열사인 삼광글라스 주식을 6억6천여만 원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테크건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관련 재판을 맡아 도덕성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후보자는 해당 재판과 이테크건설은 무관하다고

부인했다. 지난해 2월 이테크건설이 2천700억 원짜리 계약을 공시하기 직전에 남편인 오모 변호사가 이테크건설의 주식을 산 것을 두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이테크건설은 그 쪽에서는 꽤 알아주는 중견기업이라고 한다.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 2007년부터 거래했으며, 남편의 거래 스타일을 알아보니 특정회사 주식을 한 번 선정하면 계속해서 거래하는 형태"라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 대한 여러분의 기대와 우려를 잘 알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소중한 헌법 가치를 실현하고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4차산업혁명특별위, 7개 부처 업무 추진현황 점검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위원장 정병국)는 4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 등 7개 정부부처로부터 4차 산업혁명 대응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받았다. 이는 지난 4월 3일 기획재정부 등 7개 정부부처 및 항공우주연구원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청취한 데 이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정부 전반의 진행현황을 점검해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과제를 논의하고자 마련한 자리였다.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는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여러 건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심사 시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의 활용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모색되는 방향으로 조속히 법안을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했다.

특위 위원들은 국회가 상임위원회와 별도로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취지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국가 정책을 입안·집행하는데 있어 일관성·효율성을 제고하고,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사안을 한 자리에서 함께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병국 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폭넓은 의견 조율과 합리적인 정책대안 도출이 가능하도록 각 부처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글. 박민선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26건 의결

국회는 3월 28일과 4월 5일, 제367회국회(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126건의 법률안과 16건의 결의안, 1건의 동의안을 의결했다.

본회의에서 의결한 주요 법률안에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제안한 국회 개혁 제1호 법안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차산업 대응과 민생관련 법안이 다수 포함돼 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임위원회에 소관 법률안 심사를 분담하는 둘 이상의 복수 소위원회를 둘 수 있게 했고 매월 2회 이상 소위원회 개회를 정례화했으며 소위원회 개회 권고 기준도 하루에서 이틀간으로 확대해 장차 입법성과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와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 확산에 대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채용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직무 중심의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 외에도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위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인 폭행에 대해 가중처벌을 할 수 있게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다음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의결된 주요 법률안 내용이다. 〈편집자 주〉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번에 개정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복수법안소위 활성화 및 정례화'와 '국민전자청원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복수 법안소위 활성화 및 정례화'는 상임위원회가 법안소위를 복수로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안소위를 매월 2회 이상 개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법안심사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이 법이 시행될 경우 더 많은 국회의원들이 법안심사에 참여하게 됨과 동시에 법안소위에서 논의하는 법안 수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일하는 국회상을 정립함으로써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국민전자청원제도'는 국회의원의 소

개를 받아 서면으로만 청원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국회의원 소개 없이도 일정 수 이상의 국민 동의가 있는 경우 이를 청원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국민전자청원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국회청원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어 국민의 청원권이 신장되고 입법 및 정책결정과정에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거나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할 때 '특정인에의 접근금지'를 필요적으로 부과하고,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성폭력 범죄를 범한 전자장치 부착자에게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라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중대범죄에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판매죄, 불법스포츠토토도박죄, 유해화학물질 관리위반 범죄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중대범죄로 추가된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의 은닉·가장·수수행위 등의 처벌 및 몰수·추징이 가능해진다. 이로써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고를 유발한 유해화학물질 범죄나 아동·청소년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판매하는 등의 경우 범죄수익을 박탈해 범행동기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번 개정은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하는 신산업 분야의 규제에 대한 원칙과 방향을 정하는 것으로, 지난해 의결된 4개 법률(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 2019. 1. 17 시행, 금융혁신법·지역특구법 2019. 4 시행)과 함께 규제샌드박스 관련 입법을 완료한 의미가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①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제품의 출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필요에 따라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우선허용·사후규제의 원칙을 명문화하는 것과, ②신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위하여 규제의 신속확인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임시허가 등 규제특례 부여에 대한 기본법적 근거와 틀을 제시하며, ③규제개혁위원회가 신산업규제정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총괄하고, 의견제출 및 권고를 통하여 각 부처 소속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대한 조정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 등이다.

이에 따라 향후 정부가 일관된 정책방향을 가지고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운영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신산업규제정비 기본계획 등을 통하여 규제샌드박스 시행이 실질적인 규제개혁으로 이어지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안

각종 보조금, 연구개발비 및 보상금 등의 지출과

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과다·허위 청구 등에 따른 국가재정 누수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약 800여 개에 달하는 근거 법률을 각각 개정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일반법에 해당하는 동 법률 제정을 통해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로 발생한 부정이익의 환수·관리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이다.

제정법률은 부정이익을 전액 환수하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부정청구 등에 대해서는 환수에 추가하여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다만 사회적 약자 배려차원에서 장애연금·보훈급여 등은 제재부가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환수의무만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번에 개정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의 첨부서류에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세입예산 분석보고서는 세입추계의 방법 및 그 근거, 전년도 세입의 예·결산 간 차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개선사항 등을 포함해야 한다.

이 법률안은 김성식 의원이 2018년 4월 16일 대표발의했고, 개정 취지는 정부의 세입추계오차를 줄여 재정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의 세입추계오차는 2013년 8.5조 원, 2016년 9.8조 원, 2017년 14.3조 원으로 오차 규모가 점차 확대됐다. 세수오차가 크게 빗나가면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용 기반이 약화되고, 불경기엔 세수를 줄이고, 호경기에는 세수를 늘리는 세금의 경기조절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정부가 매년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세입예산 추계의 오차를 줄여 재정정책의 신뢰도와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고, 세금의 경기조절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번 개정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하기 위한 취지로,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발생한 사고로 장애를 입은 장병의 경우 전역 후 취업 등을 통한 사회복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인해 신체장애인이 된 군인(예비역군인 포함)의 경우 일반 공개경쟁시험이 아닌 별도의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군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장애를 입은 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인을 폭행해 상해·중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의료인 및 환자의 안전을 위해 비상벨 등 보안장비를 설치하고 보안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안전한 진료환경 확보를 통해 의료인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은

연구개발 성과가 우수한 의료기기 기업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우대하고 조세를 감면하는 한편, 기존 의료기기에 비해 안전성·유효성이 개선된 혁신의료기기에 대해 우선심사 등 허가·인증 심사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의료기기산업을 육성하고 혁신의료기기의 제품화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폐기물처리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일반적인 안전기준 준수의무를 지고 있으나, 특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 환경미화원이 작업차량에 치이거나 날카로운 폐기물에 찔리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정부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별도의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그 안전기준에 따라 수집·운반차량 및 안전장비 등을 갖추고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 대해서는 허가취소·영업정지, 처벌 등의 제재근거를 마련하여 안전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비리, 고용세습 및 고용강요는 청년들의 공정한 취업기회를 박탈하고 건전한 고용질서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은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의 행위를 하거나, 채용과 관련해 금품,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채용의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했다.

또한 많은 기업에서 이력서에 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 부모의 직업 및 재산정도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은 구인자로 하여금 구직자에게 기초심사자료에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과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을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직무중심의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기술인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하여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는 개략적인 정의와 임시운행허가의 근거만 규정돼 있다. 이미 국내외 여러 기업들이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 중인 가운데, 2020년에는 Level 3(부분자율주행) 단계의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제정안은 자동차전용도로상에 자율주행협력시스템과 정밀도로지도 등 관련 인프라가 우선 구축되는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해 여객 운송, 화물운송 및 자동차 안전기준 관련 규제특례를 허용해 다양한 연구 및 시범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순히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을 위한 기술개발을 넘어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에 발맞춘 다양한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 서비스의 구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NEWS

2019 MAY

“하노이 북미회담, 아쉽지만 또 하나의 새로운 출발”

문희상 국회의장은 4월 9일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제4회 한미동맹포럼’에 참석해 강연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 자리에서 하노이 회담 결렬과 관련, “비록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아쉽긴 해도 또 하나의 새로운 출발”이라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말 그대로 과정이다. 북미 간 적대관계 70년, 남북 분단 70년이라는 켜켜이 쌓인 세월과 현실이 그 안에 들어 있다. 얽힌 실타래를 풀어가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려는 것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미국과 신뢰구축을 통해 관계 개선에 적극 임하도록 하려는 목표가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이 과정에서 결코 감상적이지 않으며 북한의 핵포기 없이는 남북관계 진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외교적인 환경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또한 “북미가 계속 협상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며 “한반도에서 전쟁과 무력충돌은 절대 생각할 수 없는 옵션이라는 점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미동맹재단(KUSAF)과 주한미군전우회(KDVA)가 주관한 이날 포럼은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재확인하고 미래 동맹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개최됐다.

문희상 국회의장, 람머트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총재 접견

문희상 국회의장은 4월 10일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노르베르트 람머트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총재의 예방을 받고, 양국 의회 간 우호협력 강화 및 남북관계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 자리에서 과거 군사정권 시절 정치

를 처음 시작했을 때를 설명하며 "아데나워 재단에서 정당과 시민들을 위해 진행했던 교육과정에 참여해 많은 정신적 위안을 받았던 기억이 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한국과 독일 양국의 공통 논의 과제인 선거법 개혁 문제를 묻는 람머트 총재의 질문에 문희상 국회의장은 "각 당이 전부 합의해야 선거제도는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며 "타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독일의 모범 사례를 배우고 싶다"고 답했다.

람머트 총재는 독일 통일의 성공 요인을 묻는 문 의장의 질문에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고 상황, 문화, 역사가 다르기 때문에 조언하기 어렵다"면서 "다만, 독일은 30년 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장벽이 무너지고 통일이 되었다. 한국과 독일이 직면한 상황은 다르지만 한국도 그런 기회가 올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은 독일 초대 총리를 역임한 콘라드 아데나워를 기념해 1964년 설립됐으며, 독일 국내외 민주시민교육 및 유럽통합 지원·예술 문화 지원·대학생 대상 장학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 이금회 모임서 '의원외교' 강화 방안 제안

문희상 국회의장은 4월 12일 국회에서 여야 5선 이상 중진의원 모임인 이금회 의원들과 정례 오찬회동을 가졌다.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은 의원외교의 중요성과 의원외교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의원외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5당 대표 등과 함께 미국 순방을 갔을 때 느꼈다. 외교는 정부가 주관하고 우선적으로 나서야 하지만, 세계 각지를 방문해보면 의회 외교가 더욱 활성화돼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부터는 의원외교가 실질적으로 강화되는 계기가 마련되길 희망하며, 꼭 필요한 외교는 열심히 나가서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어 "그 방안으로 5선 이상 중진 의원들의 힘을 동원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여기 중진의원들께서 나라를 하나씩 맡아서 외교 책임자가 되는 것을 논의해보면 좋겠다. 300명 전 의원이 한 나라를 책임지고, 전문가, 달인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배치해 운영해보자"고 제안했다.

'국회를 빛낸 바른정치언어상' 시상식

문희상 국회의장은 4월 16일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제8회 '국회를 빛낸 바른정치언어상' 시상식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정치인의 언어는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면서 "오늘 바른정치언어상은 국회에서 그 어떤 상보다 의미 있는 상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어 "국회는 다양한 지역과 계층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서로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감정적인 말이 아닌 논리와 품격을 갖춘 언어로 이뤄져야 성숙한 국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를 빛낸 바른정치언어상'은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의 주관으로 2010년부터 품격 있는 정치언어를 사용하는 의원들에게 시상하고 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홍일표 의원(자유한국당) 등 총 19명의 의원이 수상했다.

“장애인 고용, 국회가 나서야”

문희상 국회의장은 4월 17일 오전 여의도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9 장애인고용촉진대회’에 참석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말이 있다. 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지만, 일자리의 절실함은 장애인에게 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면서 “여전히 보이지 않는 차별과 편견으로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복지정책 제도화를 위한 국회의 노력을 강조했다.

특히, 문희상 국회의장은 “‘장애를 극복하고 능력을 발휘하는 특별한 인재’로 대우받는 사회 풍토를 다져나가야 한다”며 “국회는 물론 사회 각 분야의 큰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문희상 국회의장은 “그동안 ‘장애인고용촉진대회’는 장애인 고용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일선 현장에서 장애인 고용을 적극 실천하는 사례들을 널리 알려주시길 당부하며, 이를 통해 기업에서의 작은 변화들이 우리 사회의 큰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주관한 ‘2019 장애인고용촉진대회’는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 노동자, 업무유공자에 대한 시상 등을 통해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개최됐다.

문희상 국회의장,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 위로전 보내

문희상 국회의장은 4월 17일 프랑스 제라드 라드셰 상원의장과 리샤르 페랑 하원의장에게 각각 위로전을 보내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에 애도를 표하고, 프랑스 국민들을 위로하는 뜻을 전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우리 모든 국민들도 프랑스인들에게 심장과도 같으며 전 인류에게는 정신적 보물과도 같은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 소식에 매우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피해가 신속히 복구되고 소실된 부분이 재건되어 프랑스 국민들의 상처받고 상실된 마음이 하루속히 치유되고 회복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를 위해 대한민국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대한민국 국민과 국회는 프랑스를 위해 기도하며 늘 함께 있겠다”고 전했다.

문희상 국회의장, 후농 김상현 의원 1주기 추모식 참석

문희상 국회의장은 4월 18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고(故) 김상현 전 의원의 1주기 추모식에 참석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 자리에서 “신경림 선생은 김상현 선배님에게 무경(無境)이라는 호를 지어주셨다. 경계가 없다. 내

편, 네편이 없다는 뜻이다"면서 "지금의 우리 국회가, 우리 정치인이 본받고 받들어야 할 정치의 본질을 몸소 실천하셨던 큰 어른이셨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배님께서 실천해오셨던 통합과 포용, 화해와 조정의 정신을 우리 후배들이 받들어야 한다"면서 "새로운 100년을 맞이하는 중요한 시기에 민주주의의 정신을 다시 생각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실현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문희상 국회의장은 "그 곳 하늘에서도 대한민국 국회와 대한민국을 지켜봐달라. 새로운 100년을 슬기롭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길 소망한다"고 했다.

고(故) 김상현 전 의원은 1965년 국회의원에 당선돼 6·7·8·14·15·16대국회에서 6선 의원을 지냈으며, 2018년 4월 18일 향년 83세에 노환으로 타계했다.

문희상 국회의장, CSGK 하원의원 대표단 예방 받아

문희상 국회의장은 4월 18일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미 의회 한국연구모임(CSGK : Congressional Study Group on Korea) 하원의원 대표단의 예방을 받고, 북핵 문제 등 한미 간 관심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CSGK 대표단의 방한을 환영하며 "그동안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미국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한 치의 오차도 없는 한미동맹으로 또 다른 평화를 이루길 바란다"고 했다.

특히, 문희상 국회의장은 "미 의회의 한국연구모임을 알게 되고 우리 의회도 미국연구모임을 새롭게 구성했다. 오는 5월에 출범해 같은 달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면서 "자꾸 만나야 대화가 되고 역지사지로 상대를 이해할 수 있다. 한미동맹과 양국 의회관계 강화를 위해 자주 만나 대화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아미 베라 하원의원 겸 CSGK 공동의장은 "오늘 DMZ을 방문했다.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지 불과 1년밖에 안 됐지만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직접 목도했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한미 간 강력한 파트너십과 우정이 필요하며 이는 의회 간 교류를 통해 더욱 공고해져야 한다"고 화답했다.

마이크 켈리 하원의원 겸 CSGK 공동의장은 "우정을 바탕으로 허심탄회하게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도 대화하고 싶다"며 "한국의회의 미국연구모임을 환영하며, 기다리고 있겠다"고 답했다.

한편 미 의회 한국연구모임(CSGK)은 미 의회 내 친한파·지한파 의원을 늘리고, 한국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의회 간 소통 활성화 등을 위해 2018년 2월 발족했다.

문희상 국회의장, 국립 4·19 민주묘지 참배

문희상 국회의장은 4월 19일 오전 수유동에 위치한 국립 4·19 민주묘지를 찾아 헌화한 뒤 참배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방명록에 "임시정부 100주년, 3·1운동 100주년에 즈음하여 4·19 민주정신을 되새깁니다"라고 적어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넋을 기렸다. 참배를 마친 후에는 4·19 민주묘지도 둘러봤다.

특히, 문희상 국회의장은 경복고 1학년 때 같은 집에 하숙했던 고(故) 안종길 의사(당시 경복고 2학년)의 묘지와 고(故) 이기택 전 민주당 대표의 묘지를 차례로 들렀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993년 이 전 대표가 민주당을 이끌 당시 비서실장을 지낸 바 있다. 평소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 전 대표에 대해 "자신의 고집을 꺾으면서 동시에 자기의 의지를 관철하는 '경청의 리더십'은 압권"이라며 그의 온유함의 리더십을 언급하곤 했다.

"스리랑카 국민들의 희생,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 드려"

문희상 국회의장은 4월 22일 스리랑카 카루 자야수리야 국회의장에게 조전을 보내 콜롬보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로 인해 많은 스리랑카 국민들이 목숨을 잃고 다친 것에 대해 애도를 표하고, 스리랑카 국민들을 위로하는 뜻을 전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국회와 국민은 이번 테러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 같은 폭력행위는 반인륜적 행위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믿는다"며 "앞으로도 존엄한 생명을 위협하고 앗아가는 테러행위를 막는 데 스리랑카를 비롯한 국제사회와 함께 적극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발생한 피해와 상실이 가능한 한 조속히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면서 "대한민국과 국회도 이번 테러로 인한 희생과 피해를 극복하는 데 가능한 지원을 다 하도록 할 것이며 스리랑카 국민들과 늘 함께 있겠다"고 전했다.

문희상 국회의장, '음악 산업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 참석

문희상 국회의장은 4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음악 산업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케이팝으로 대변되는 우리 음악의 저작권 보호대책과 음악 산업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 자리에서 "백범 김구 선생은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를 통해, 선생이 소망하는 나라는 군사대국도, 경제대국도 아닌 문화대국이요, 오직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라고 말씀하셨다"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한류열풍과 케이팝을 필두로 문화대국에 올라섰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희상 국회의장은 "케이팝 산업은 세계 곳곳에서 민간외교사절이자 문화사절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 또,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 "한국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케이팝의 산업영역은 커다란 잠재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희상 국회의장은 “케이팝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저작권 침해와 불법복제 등 불법시장의 폐해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연간 손실액이 1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클라우스 슈바프 세계경제포럼 의장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저작권 등 지식재산을 강력히 보호하는 국가에 부(富)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면서 “우리도 케이팝 산업을 비롯한 한류문화 산업들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 공무직근로자와 단체협약 체결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월 2일 국회 소속 공무직근로자(민간근로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청소·주차관리 등 고령친화직종 공무직근로자의 정년이 60세에서 65세로 연장됐으며, 공무직근로자에게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자녀돌봄휴가’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무직근로자의 작업구역 지정 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사무실 개선 및 노후 집기 교체 등 작업환경 개선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국회사무처는 “이번 단체협약 체결이 공무직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및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모범적인 고용주로서 공무직근로자의 처우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2017년 1월 용역업체 소속이던 청소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이래, 지속적으로 용역업체 소속 민간근로자의 직접 고용을 확대하고 있으며, 현재 총 420명의 공무직근로자(민간근로자)가 국회사무처에서 근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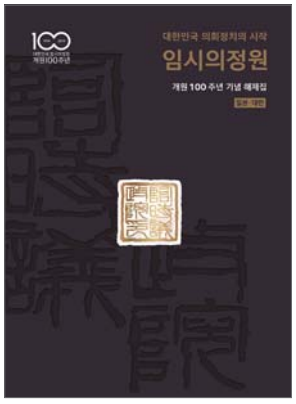
국회, 산불 이재민 구호에 ‘국회고성연수원’ 제공

국회는 강원도 고성지역 산불 이재민을 위해 국회고성연수원 시설을 제공했다. 이는 국가적 재난상황 극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문희상 국회의장은 4월 6일 이와 같은 내용을 국회사무처에 지시했다.

고성연수원은 지난 4월 4일 화재 발생 지역으로부터 8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한때 연수원 측도 직원 및 투숙객의 긴급 대피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산불이 연수원 쪽으로 번지지 않고 큰불이 잡히면서 이재민 구호를 위한 시설 제공을 검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4월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산불 피해에 대한 애타는 심정을 전하면서 “이럴 때일수록 국회는 오직 국민의 삶에 집중해 더욱 분발해야 하겠다”며 “연이어 일어난 재난재해에 소속 상임위를 중심으로 대책마련과 민생입법에 전심전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국회의 책무를 강조한 바 있다.

국회도서관,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 도서 2종 펴내



국회도서관(관장 허용범)은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4월 10일)을 기념해 임시의정원 관련 기록물을 집대성한 '해제집'(408쪽)과 '목록집'(288쪽) 등 2종의 자료집을 4월 5일 발간했다. 이번 자료집에는 국회도서관이 그동안 국내 유관기관은 물론, 미국, 일본, 대만 등에서 조사·발굴·수집한 임시의정원 관련 기록물이 담겨 있다.

임시의정원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정하고 대한민국이 민주공화제임을 천명한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제정·공포한 대한민국 국회의 뿌리다. 임시헌장에 '대한민국은 임시의정원의 결의를 거쳐서 임시정부가 통치한다'라고 규정돼 있을 정도로 임시의정원의 결의는 임시정부의 운영보다 우선하는 것이었다. 이번에 발간한 자료집은 임시의정원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를 그 위상에 조응할 수 있도록 복원하고,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기획됐다.

국회예산정책처, '2019 미리 보는 법안 비용추계' 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이종후)는 '2019 미리 보는 법안 비용추계'를 4월 15일 발간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비용추계를 처음 시작한 2004년에는 비용추계 건수가 59건에 불과했으나, 2015년 국회예산정책처가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 전담기관이 되면서 2014년 557건에서 2015년 1천994건으로 크게 증가했고, 2018년에는 3천179건으로 3년 만에 50% 넘게 증가했다.

'2019 미리 보는 법안 비용추계'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의원발의 빈도가 높았거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법률안에 대하여 비용추계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유사 법률안에 소요되는 비용을 미리 가늠하고 법률안을 성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본 보고서는 '지출법안'과 '수입법안'으로 나누어 법률안별로 주요 정책 내용을 소개하고,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추가 재정지출 또는 재정수입의 증감규모를 추계하여 제시했다. 또한 쟁점이 되는 추계변수의 조정에 따라 시나리오별 비용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책 내용 변화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등을 참고할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장애인의 미래를 그리다' 컨퍼런스 개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국회인권포럼 및 한국장애인개발원과 공동으로 4월 17~18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국내 발효 10주년과 제39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지금까지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의

성과를 검토하고, 국제 인권적 관점에서 향후 정책 비전을 논의하는 '2019년 국제컨퍼런스: 장애인의 미래를 그리다'를 개최했다.

개회식에는 최경숙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홍일표 국회인권포럼 대표의원(자유한국당)과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의 환영사가 있었고,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과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성찬 의원(자유한국당)의 축사가 있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서면으로 축사를 전했다.

이번 국제컨퍼런스는 김미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과 토마스 와타나베 아인슈타인재단 모스재활병원 뇌손상센터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17일에는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및 재활치료, 장애인 문화권 및 체육활동 등 2개의 세션, 18일에는 중증장애인직업재활사업 및 해외사례, 유니버설디자인 환경 및 해외사례,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자기결정 등 3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올 7월부터 시행되는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장애인 복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예상되는 중요한 시점에서 이번 국제컨퍼런스의 개최를 통해 입법 및 정책과제를 구체화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 장애인 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미래연구원, 2019년도 연구착수 보고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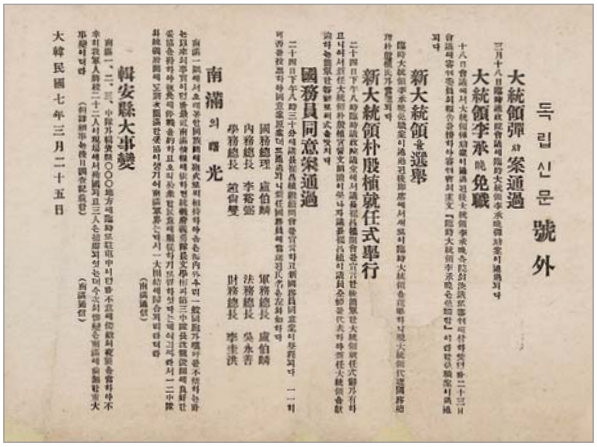
국회미래연구원(원장 박진)은 4월 11일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2019년도 사업에 대한 연구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미래연구원은 2018년에 수행한 13개 분야별로 미래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분야 간 융합을 통해 나타나는 미래의 모습을 예측하고 이에 대비한 전략을 도출할 계획이다.

나아가 미래연구원 연구진은 13개 분야를 종합해 우리나라의 미래를 네 가지로 나누고 이 중 우리 국민이 원하는 국가의 모습을 선택하도록 할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미래연구원은 바람직하고 국민이 원하는 미래의 모습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장기발전전략을 수립해 제시할 예정이다.

2019년 미래연구원 사업에는 2018년 사업에 대비해 행정부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평가하는 미래영향평가연구사업, 5개 정당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사업이 추가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초대 대통령을 탄핵한 임시의정원 의원들


독립신문 號外

大統領彈劾案通過

大統領李承晩免職

新大統領을選舉

新大統領补缺補就任式擧行

國務員同意案通過

國務總理 盧伯麟
內務總長 李裕弼
學務總長 趙尙燮

軍務總長 盧伯麟
法務總長 吳永善
財務總長 李圭洪

南滿의 曙光

輯安縣大事變

大韓民國七年三月二十五日

임시정부 대통령 이승만의 탄핵을 보도한 '독립신문' 호외 (1925. 3. 25)

1925년 3월 23일, 임시정부 대통령 이승만이 탄핵당했다. 이승만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었고, 임시정부는 우리 민족 역사상 처음으로 수립된 민주공화제 정부였다. 민주공화제를 도입하고 처음으로 뽑은 대통령을 탄핵한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을 탄핵한 것은 임시의정원이었다.

임시의정원은 현재 국회와 같은 기관이다. 행정부인 임시정부와 더불어 의정원은 입법기관으로 역할하며, 헌법과 각종 법률안을 제정했다. 행정부를 견제하는 직권도 있었다. 직권행사는 '대통령 선거', '국무원의 출석 답변 요구', '관리의 위법행위 조사', '대통령과 국무원의 탄핵' 등 행정부의 국정 전반에 걸쳐 있었다. 의정원이 직권을 행사해 대통령을 탄핵한 것이다.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것은 의정원이었다. 상해·연해주·국내에서 수립된 세 임시정부가 통합을 추진할 때, 의정원은 헌법을 개정해 행정수반의 명칭을 대통령으로 결정하고, 1919년 9월 6일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당시 이승만은 미국에 있었다. 11월 3일 국무총리 이동휘를 비롯한 정부 각원들이 취임했지만, 이승만은 부임하지 않았다. 이동휘에게 편지를 보내 "상해의 일은 국무총리가, 미주의 일은 자신이 담당하되 중대한 일은 서로 상의하자"며, 자신은 미국에서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알렸다.

대통령이 정부 소재지에 부임하지 않으면서, 임시정부는 초기부터 혼란에 휩싸였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원들과 대통령 사이에 마찰과 갈등이 일어난 것이다. 부임문제를 둘러싸고 국무원들과 대통령 사이에 전문과 편지가 오갔다. 이

과정에서 서로 힐난하는 일도 있었고, 막말이 오가기도 했다. 또 윌슨에게 제출했던 '위임통치청원' 문제가 알려지면서, 안팎에서 이승만에 대한 반대여론이 일어나기도 했다.

국무원과 대통령 사이에 갈등과 대립이 일어나자, 의정원이 나섰다. 1920년 3월 이유필을 비롯한 의원 17명이 주도해 대통령의 부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의원들이 대통령에게 부임할 것을 건의했지만, 대통령은 상해로 부임하지 않았다.

의정원에 이어 국무원의 차장들도 나섰다. 1920년 5월 김립·윤현진·정인과·김희선·이규홍·김철 등이 "신성한 독립사업에 불신성한 인물이 첫 자리에 있음이 정신상 불가", "국무원이 결합치 못하니 차라리 뒤집고 새로 조직함이 일 진행에 유익" 등의 이유로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안을 의정원에 제출한 것이다. 이들은 불신임안을 제출하면서, 자신들의 총사직도 결의했다.

상황이 험악해지자 이승만 대통령은 부임을 결심했고, 1920년 12월 5일 상해에 도착했다. 대통령으로 선출된 지 1년 3개월 만이었다. '독립신문'은 "우리 임시대통령 이승만 각하 상해에 오시도다"라며 환영과 기대감을 표시했고, 상해교민단에서는 성대한 환영회를 개최하여 대통령을 맞았다. 1921년 1월 신년축하식을 계기로 이승만은 대통령으로 공식적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했다.

대통령 주재하에 국무회의가 개최됐지만, 처음부터 순조롭지 못했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사이에 이견이 노출되고, 불신과 대립이 일어난 것이다. 한 달도 안 된 1921년 1월 24일 이동휘 국무총리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자신의 의견을 묵살한다"며 사임했다. 이어 학무총장 김규식, 군무총장 노백린, 노동국총판 안창호 등도 사퇴했다. 임시정부는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다.

임시정부가 혼란에 빠져들자, 북경에서 활동하고 있던 인사들이 들고일어났다. 박은식·원세훈·왕삼덕 등은 "통일적 강고한 정부를 조직"할 것을 제의하고, 이를 위해 국민대표회의를 소집하자고 주장했다. 또 신채호·박용만·신숙 등은 군사통일회의를 추진하면서, 54명의 공동명의로 위임통치청원은 '매국매족의 행위'라며 이승만에 대한 성토문을 발표했다. 여기에만 그치지 않았다. 이들은 이승만과 임시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결의하고,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의 총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안과 밖에서 제기된 공격을 감당하지 못했다. 3월 5일 장붕과 함께 상해를 떠나 남경으로 가버렸다. 법무총장 신규식으로 하여금 국무총리를 맡아 수습하라는 조치를 취했지만, 북경 세력의 태도는 강경했다. 신철·김약산 등 10여 명의 모험단원들이 상해로 내려왔다. "이들은 이승만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 즉시 비상수단을 취하려고 폭탄과 권총을 휴대하고 있다"는 일제 측 정보자료로 보아, 무력행사도 불사하였던 것 같다.

임시정부 대통령인 이승만과 임시의정원의 갈등

이승만은 상해로 돌아오지 않았다. 5월 17일 '외교상 긴급과 재정상 절박'으로 인해 상해를 떠난다는 교서를 의정원에 보내고, 5월 29일 상해 북쪽에 있는 오송항에서 배를 타고 하와이로 돌아갔다. 부임한 지 6개

나창헌 탄핵심판위원회 위원장

월 만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간 것이다. 이후 이승만은 하와이에서 동지회를 조직해 활동했다. 대통령이란 직책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지만, 무정부상태인 임시정부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었다.

대통령과 국무원들 대부분이 떠난 후, 임시정부의 무정부상태는 계속됐다. 안팎에서는 새로운 방법을 찾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1923년 1월부터 국내외 인사들이 모여 국민대표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 임시정부를 없애고 새로운 조직을 결성하자는 주장과 임시정부를 개조해 그대로 유지하자는 주장이 맞섰다. 창조파와 개조파로 나뉘어 대립하다가 회의는 결렬되고 말았다.

방안을 찾지 못하자, 다시 의정원이 나섰다. 의원들이 정국타개 방안의 하나로 대통령 탄핵안을 제출한 것이다. 1923년 4월 조덕진 등 12명의 의원들이 "아무 공무가 없이 정부소재지를 떠나 정무를 막히게 하고 시국을 수습치 못함" 등의 이유로 탄핵안을 제출했고, 대통령제를 폐지하자며 헌법도 개정하자고 했다. 불신임이 탄핵으로 비화한 것이다.

탄핵은 박은식 내각이 출범하면서 추진됐다. 의정원은 1924년 12월 박은식을 대통령 대리 겸 국무총리로 선출해 소위 박은식 내각을 출범시켰다. 출범 직후 각원 전부와 의정원 의장 최창식 등이 회합해, 헌법개정과 대통령 탄핵문제를 논의했다. 탄핵은 의정원에서 추진했고, 1925년 3월 14일 의원 최석순·문일민·임득산·강경선·나창헌·강창제·김현구·고준택·곽헌 등의 연서로 '임시대통령이승만탄핵안'이 의정원에 제출됐다. 의정원은 3월 18일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탄핵안을 통과시킨 후, 탄핵심판위원회를 구성했다. 심판위원회는 위원장 나창헌과 곽헌·채원개·김현구·최석순 등 5명이었다. 이들은 이승만의 위법사실을 조사했고, 3월 21일 "이승만은 직무지를 떠나 난국수습과 대업진행에 하등 성의를 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정원의 결의를 부정하고 헌법을 부인하며 국정을 방해" 등의 내용으로 된 '심판서'를 작성했다. 심판위원회의 심리를 거치면서 탄핵이 면직으로 바뀌었고, 3월 23일 '임시대통령 이승만을 면직'이라고 한 면직안이 의정원의 결의로 통과됐다. 의정원에서 대통령을 탄핵한 것이다.

글·사진. 한시준 교수(단국대 사학과 동양학연구원장)

꽃 진 자리 열매 맺듯 '결실' 기다리는 5월

여의도에서 봄의 절정은 의사당을 둘러싼 벚꽃이었습니다. 수많은 상춘객을 맞았던 벚꽃이 제 몫을 다하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자 이제는 연둣빛 세상입니다.

하지만 봄은 한번으로 끝나지 않나 봅니다. 이번에는 뒤늦게 겹벚꽃이 만발했습니다. 아름다움이 무게를 이기지 못해 가지가 휘어질 지경입니다. 꽃 진 자리에 열매 맺듯 임시국회가 열린 국회도 민생의 결실이 풍성해 지기를 기원하는 5월입니다.

글. 김종해 **사진.** 김지범

30대, 40대가 귀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분유 판매량은 지난 2000년에는 2만 7천 톤이었는데 요즘은 1만4천 톤 남짓이다. 분유 소비가 급감한 것이다.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이유를 추측해볼 수는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태어나는 아이들의 숫자가 줄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0년에는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63만 명이었는데 작년에는 36만 명에 그쳤다. 아이들이 줄어드니 아이들이 먹는 분유의 총량도 당연히 줄어드는 것이다.

분유 소비량이 왜 감소했는지 묻는 질문은 그래서 어리석은 질문이다. 인구구조만 들여다보면 답이 쉽게 나온다. 아이들에게 무슨 큰일이 생기거나 새로운 트렌드가 생겼거나 무슨 미스테리한 변화가 있는 게 아닌 것이다. 태어나는 아이들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 말고도 요즘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변화 중에 우리가 잘 모르고 있지만 꼭 알아둬야 될 게 또 있다. 30대 인구와 40대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30대 인구는 작년에 비해 올해 22만 명이 줄었고, 40대 인구는 작년에 비해 올해 14만 명이나 적다. 우리나라 인구가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서 그런 거냐면 그건 아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데 유독 30대 인구와 40대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다. 20대 인구도 15만 명씩 줄어들고 있고 50대 인구도 2만 명 정도 줄고 있으니 지금 우리나라는 60대 이상 고령층의 인구만 계속 늘고 있는 셈이다.

그럼 왜 30대, 40대 인구가 줄어들고 있을까. 30대 인구가 20만 명 넘게 줄어드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불규칙하고 괴상한 인구구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올해 새로 30세가 된 1989년생은 64만 명인데 올해 30대를 졸업하고 새로 40대가 된(작년까지 39세였던) 1979년생은 86만 명이나 된다. 1979년의 우리나라에서는 1989년의 우리나라에서보다 22만 명이나 더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기 때문이다.

인구구조가 안정된(매년 출생률이 큰 변화가 없는) 나라에서는 매년 태어나는 아이들 숫자도 비슷하기 때문에 새로 30세가 된 사람이나 새로 31세가 된 사람이나 새로 40세가 된 사람이나 그 숫자는 거의 비슷하다. 그게 정상이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어떤 초등학교의 6학년 졸업생과 그해에 그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신입생은 숫자가 비슷한 게 정상인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다르다. 1970년에는 매년 100만 명 안팎의 아이가 태어났는데 1980년에는 86만 명만 태어났고 1990년에는 64만 명, 2010년에는 47만 명만 태어났다. 10년 간격을 두고 이렇게 출생아 숫자가 드라마틱하게 급감한 나라는 없다. 그러다 보니 아주 혼란스러운 통계가 쏟아지고 있다.

30대 인구와 40대 인구가 꽤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연령별 자동차 구입대수' 통계를 보면서 '요즘 젊은 층들이 자동차 잘 구매하지 않는구나'라는 엉뚱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실제로 요즘 자동차를 구매하는 연령층을 보면 30대와 40대는 줄어들고 있고 반면 60대 구매자가 늘고 있다. 이걸 젊은 층이 자동차 구매를 거부하거나 대중교통 친화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된다. 그냥 30대, 40대 인구가 감소하다보니 생긴 일일 수도 있는 일이니까.

인구구조와 30, 40대 일자리 숫자의 관계

요즘 자주 들리는 뉴스 중에는 우리나라의 30대, 40대가 무너지고 있다는 뉴스도 있다. 60대 노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일자리는 늘어나는데 30대, 40대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3월에 발표된 일자리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30대 취업자 수와 40대 취업자 수는 지난해보다 각각 8만 2천 명, 16만8천 명 줄었다.

일자리가 늘어도 부족할 판에 한창 일할 나이인 30대와 40대의 일자리가 수만 개씩 줄어들고 있다니 큰일도 이런 큰일이 아닌 것 같지만 30대 인구는 최근 1년 사이에 22만 명, 40대 인구는 15만 명이 줄어든 것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다. 어제까지 40대였던 49세 근로자들 수십만 명이 오늘부터는 50대로 분류되다 보니 40대 취업자 수에서는 이들이 갖고 있던 일자리 숫자만큼 구멍이 생기는 것뿐이다. 그럼 50대 인구와 50대 일자리는 늘어나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다. 작년까지 59세였다가 새로 60세가 되면서 50대 집단에서 빠져나가는 인구가 새로 50대가 되는 인구보다 2만 명쯤 더 많기 때문이다.

40대 일자리가 줄어드는 게 걱정이 되거든 40대 암환자, 40대 실업자, 40대 사회부적응자, 40대 신용불량자들 통계도 뽑아보면 알 것이다. 모두 줄어들고 있다. 그냥 40대 인구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인구구조가 크게 바뀌지 않는 한 30대, 40대의 일자리 숫자에는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 아무리 불경기가 닥쳐도 30대, 40대는 어떤 식으로든 돈벌이를 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대기업 구조조정이 심해져서 퇴사하는 30대, 40대가 많아져도 일자리 통계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이들은 며칠 쉬다가 대리운전이라도 시작하게 되고 그러면 취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취업자 숫자가 별 차이가 없다고 이들이 별일 없이 괜찮은 것도 아니고 갑자기 취업자 숫자가 줄어들었다고 무슨 큰일이 난 것도 아니라는 말이다.

몇십 년 전만 해도 40대 대선주자들도 많이 나오고 30대 사장, 20대 이사도 자주 나왔는데 요즘은 왜 다들 60대, 70대가 여전히 자리를 꿰차고 있느냐는 질문도 인구구조의 탓으로 답할 수 있다. 40대 정치인들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던 1970년대 초에는 우리나라의 중위연령이 20세에 불과했다. 20세만 되면 우리나라에서 연령 서열로 중간쯤은 됐다는 뜻이다. 지금은 중위연령이 43세다. 지금은 43세라고 해도 예전의 20세 정도의 연령 서열에 불과하니 우리나라의 40대는 여전히 '팀장' 명찰만 달고 있는 것이다.

30대, 40대 인구계층에서 뭔가가 2~3%포인트 정도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은 대부분 인구구조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언론들이 쏟아내는 괜한 호들갑에 놀라게 될 일이 앞으로 자주 생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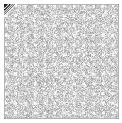
글. 이진우(MBC FM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진행자)

'돌아온 선거철' 국회는 어떤 모습으로 비칠까

김문영 기자
MBN 정치부

기자가 국회로 출입처가 배정돼 취재를 시작한 것은 지난 2016년 4월, 총선 때였다. 이후 예상치 못한 탄핵 정국과 대선 및 정권교체와 지방선거까지 모든 국회의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트리플 선거' 취재의 영광을 누리게 됐다. 그렇게 만 3년을 보내고, 지금은 다시 돌아올 총선을 1년 앞두고 각 당이 일찌감치 전국 단위의 조직 정비에 들어가며 채비를 하는 모습을 관찰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묻고 싶다. 다시 다가오는 선거철에 국회는 국민 앞에 어떤 모습으로 비칠까.

총선을 1년 남짓 앞둔 벌써부터 정치권에서는 "국회가 그사이 아무 일도 못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늘 그래왔기 때문'이란 것. 총선을 염두에 둔 각 당의 '무한 대치'가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5월에 예정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선 '협상을 잘하는' 원내대표가 굳이 필요 없을 것이란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야당은 야당대로 총선 1년 카운트다운을 하며, 야성을 기르며 장외투쟁에 나서고 있다. 정계개편 또는 독자적인 제3지대 노선 형성을 꾀하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의원들의 행보도 변수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의원들이 "국회가 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을 내놓으면 일부 기자들은 역시 별다른 거부 반응 없이 "예상되는 수순"이라고 말하며 호응



한다. 하지만 "원래 이 정치판이 그래"라고 말하며 무엇도 해보지 않으려는 '쉬운 수긍'이 그동안 이곳 국회를 더욱 무기력하게 만들어온 것은 아닐까.

어떻게든 선거에서 상대 당을 '무너뜨리고' 정권의 동력을 떨어트리려는 정치가 관행이 된 곳에서는 어떤 입법에 대한 협조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우리 국회에서 매번 반복돼 온 모습이 그러했다. 그 원인을 여야 국회의원들은 공통적으로 다름 아닌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로 지목했다. 대통령이 큰 권한을 갖고 있으니 야당이 되면 어떻게든 정권을 잡기 위해 총력을 쏟고, 흔한 프레임이지만 '정권 심판론' 또는 '이대로는 못 살겠다, 경제 필패론'을 들고 나와 정국을 흔들려고 들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공통적인 문제 인식에도 불구하고 개헌은 물 건너간 분위기다.

이미 지난해 '6·13 지방선거 동시 개헌'이란 제19대 대선 공통 공약을 두고 수십 차례 씨름을 했던 여야 의원들은 이제 개헌 논의에 무덤덤하다. 올 4월 뜻깊은 임시의정원 100주년을 맞아 문희상 국회의장이 "내년 총선 때 개헌 국민투표 하자"라며 '공멸'의 정치 환경을 바꾸기 위한 제안을 했지만, 깊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한 중진 의원은 기자에게 "이렇게 된 이상, 국민이 들고 일어나지 않는 이상 개헌이 되겠는가"라고 말했다. 안타깝지만, 국회 스스로는 어렵고 87년 항쟁 때나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같은 국민적 요청이 있을 때에야, 개헌과 같은 개혁도 가능할 것이란 해석이었다.

근본적인 해법인 개헌이 어렵다면, 그나마 선거철에도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소위의 정례화'가 있을 수 있다. 대외적인 메시지 전달에 집중하는 상임위의 전체회의와 달리, 각 상임위 소위에선 법률안에 대한 체계적인 심사가 이뤄지는 만큼 이를 정례화하면 각 단위의 세부적인 논의에 속도를 높이는 데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란 아이디어다.

최소한 '약속은 지키자'

그렇다면 기본적인 약속이라도 지키자는 제안을 해본다. 각 여야 원내대표가 대치 정국을 풀기 위해 머리를 맞댄 뒤에 전 언론사 앞에 내놓았던 합의문의 내용은 꼭 지키도록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안이라도 논의해보자는 것이다. 국민 앞에서 한 약속도 파기하는 상황을 다수 봤다. 가장 최근을 돌이켜보면, 지난해 12월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합의문 1항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가 들어 있었지만, 합의문 작성에 함께한 야당 원내대표가 이후 "의원정수를 10% 줄여서 270석으로 하자는 게 한국당의 안"이라며 비례대표제를 아예 폐지하는 안을 냈다.

올봄, 미세먼지와 관련해 여론이 악화되자 민주당을 포함한 여야가 내놓은 합의사항은 어떤가. 중국발 미세먼지를 고려해 중국과 외교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방중단을 구성하자는 데 합의했지만,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이라면 하지 않는 게 맞다.

과정만큼 중요한 것이 결과

국회사무처와 의원실을 다니면 밤낮으로 애쓰는 이들의 노고를 들을 수 있다. "국회가 안 돌아가면 오히려 편하지 않겠냐"는 시선은 말도 안 되고, 언제 국회 일정이 잡힐지 몰라 전전긍긍해야 한다는 슬픈 얘기다. 기껏 올린 법안들이 정쟁에 고이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보면 맘이 참 아플 테다. 숨가쁜 과정을 취재한 기자들도 허무하긴 마찬가지다. 과정만큼 결과가 중요하다. 야당이든, 여당이든, 권력만 잡으면 된다는 식의 관망으로 남은 시간을 보내려 해선 안 된다. 그동안 정치권 모두에게 원망이 쌓이기 때문이다. 지근거리에서 일하는 국회 근무자들의 헛헛한 마음을 보듬어줄 '성과를 내며 일하는' 정치가, 총선 민심을 사로잡을 정치와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전선 없는 세상 올까

- 무선전력전송 기술

요즘 전자기기를 몇 개씩 들고 다니는 건 유별난 일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기는데, 바로 충전이다. 신경 써서 배터리를 관리하지 않으면 기껏 외출했다가 배터리가 부족해 사용하지 못하는 낭패를 겪을 수 있다. 여러 기기를 일일이 충전하는 것도 문제다. 충전 케이블을 찾아서 끼워주는 게 의외로 귀찮은 일인 데다가, 한꺼번에 여러 기기를 충전하면 선이 엉키기 일쑤다. 그래도 최근에는 무선충전을 지원하는 기기가 많아졌다. 충전 케이블을 단자에 꽂는 대신 무선충전기에 올려놓기만 하면 충전이 된다. 굳이 선을 꽂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는 편리해졌지만, 정해진 위치에 놓아야만 해서 완전히 자유로워졌다고는 할 수 없다.

2017년 가을 애플은 '에어파워'라는 무선충전매트를 출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정해진 위치가 있는 게 아니라 매트 위의 아무 곳에나 올려놓으면 충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애플은 에어파워의 출시를 취소했다. 원하는 수준으로 구현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무선충전 기술은 더욱 중요해질 게 분명하다. 이미 생활 구석구석까지 침투한 스마트폰을 필두로 웨어러블 기기, 센서, 드론 등 전력을 필요로 하는 장치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런 장치를 일일이 신경 써서 충전해야 한다는 건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 될 것이다. 따라서 무선충전 기술, 좀 더 넓게는 무선전력전송 기술은 미래에 우리 생활을 획기적으로 편리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무인운송수단으로 쓰이는 드론을 상상해보자. 배터리가 다 되면 사람이 선을 꽂아 충전을 해줘야 한다. 물류 센터처럼 드론을 많이 이용하는 곳이라면 사람이 드론의 배터리를 관리하는 게 매우 어려운 일일 수 있다. 그런데 배터리가 부족한 드론이 자동으로 날아서 충전패드 위에 올라간다면 어떨까. 굳이 사람이 관여하지 않아도 충전이 되므로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다. 착륙할 필요도 없이 아예 공중에서 충전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무선전력전송 기술은 이와 같은 일을 가능하게 만든다.

무선전력전송은 전기에너지를 다른 에너지로 바꾼 뒤 무선으로 전달하고 다시 이를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기술이다. 현재 스마

트폰과 같은 휴대용 기기의 충전에 쓰이는 무선전력전송 방식은 자기유도 방식이다. 코일 2개가 가까이 놓여 있을 때 어느 한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 자기장이 다른 코일에 유도전류를 일으킨다.

원리 자체는 간단하다. 스마트폰을 충전한다고 해보자. 충전기에 전원을 연결하면 충전기에 들어 있는 코일에 전류가 흘러 자기장이 발생한다. 이 자기장이 스마트폰 안에 있는 2차 코일에 유도전류가 흐르게 한다. 이 전류를 이용해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식은 전송할 수 있는 전력의 양이 작아서 스마트폰 같은 소형 기기에나 쓸 수 있다. 게다가 전송 거리가 5mm 이내로 짧아서 선만 없다 뿐이지 유선 충전과 큰 차이가 없다. 오히려 정해진 위치에 놓아야 하기 때문에 충전하면서 사용하기에는 유선 충전보다 못할 수도 있다.

무선충전 기술이 활발히 쓰이면서 우리의 생활을 바꾸어놓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 먼저 전력을 전송할 수 있는 거리가 늘어나야 하고, 3차원 공간 어디에 있어도 충전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여러 가지 기기를 충전할 수 있어야 한다.

우주에서 지구로 전기를 보낸다?

현재 다양한 방식으로 이런 한계를 극복하려는 연구가 진행 중이다. 유도전류를 만든다는 점은 비슷하지만 공진 주파수를 이용해 전력을 전송하는 자기공명 방식은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몇 센티미터에서 몇 미터까지 전송할 수 있는 거리가 늘어나고, 특정 위치에 놓을 필요 없이 충전 범위 안에만 있으면 충전이 된다. 무선 인터넷을 쓸 수 있는 와이파이 존이 있는 것처럼 충전이 가능한 충전 존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거리가 멀어지면서 전송 효율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다. 게다가 전자기파가 인체에 악영향을 끼칠 위험이 있다. 상용화가 이루어지려면 인체 유해성을 확실히 검증해야 한다.

자기장이 아닌 다른 원리를 이용하기도 한다. 전기에너지를 전자기파로 바꾸어 전송하는 게 대표적이다. 흔히 무선통신에 사용하는 전파를 생각하지만,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엑스선 등이 모두 전자기파에 속한다. 이 중에서 가장 흔히 언급되는 것은 마이크로파(파장이 수 밀리미터에서 1미터 사이)와 레이저(가시광선)이다.

이 방식을 이용하면 훨씬 더 먼 곳까지 전력을 보낼 수 있다. 길게는 수십 킬로미터까지도 가능하다. 원하는 방향으로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 보낼 수 있는 전력의 양도 현재 상용화된 기술보다 많아 전기자동차, 무인비행기 등에 쓸 수 있다. 원하는 방향으로 정확히 쏠 수 있는 레이저를 이용한다면 날아다니는 무인비행기에 계속 전력을 공급해 비행시간을 늘릴 수 있다. 지상에서 실시간으로 무인비행기를 추적하며 레이저 수신기를 조준해 발사하면 된다.

더욱 미래적인 아이디어로는 우주태양광 발전소가 있다. 우주에 거대한 태양광발전소를 짓고, 거기서 만든 전기를 전자기파로 바꿔 지구에 전송하는 기술이다. 1960년대에 미국의 우주공학자 피터 글레이저가 제안한 미래의 친환경 에너지원이다. 이렇게 전자기파를 이용하는 방식의 단점은 전송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과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인체에 유해하다면 사람이 타고 있는 전기자동차 같은 곳에 쓰기 어렵다.

지금까지 나온 기술에는 제각기 문제가 있어 완전히 선 없는 편리한 세상을 만드는 데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무선전력전송이라는 기술에는 엄청난 이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연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전송 거리와 효율, 안전성을 모두 만족하는 새로운 기술이 나온다면 그제야 우리는 진정 혁신적인 세상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글. 고호관(과학칼럼니스트)

종교적 사유와 그윽한 미소, 반가사유상의 미학

2013년 10월~2014년 2월,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박물관에서 '황금의 나라, 신라' 특별전이 열렸다. 신라인들이 황금으로 만든 금관과 장신구, 불상, 토기, 공예품 등 신라의 문화재 130여 점을 선보이는 자리였다. 신라의 많은 문화유산이 관람객들을 사로잡았지만 단연 압권은 국보 83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金銅彌勒菩薩半跏思惟像)이었다. 미국 언론은 이 반가사유상을 두고 "세계적 수준의 세련미, 그 아름다움이 할 말을 잃게 만든다"고 평가했다. 세계 곳곳에서 모여든 관람객들이 국보 83호 반가사유상에 매료된 것이다.

그런데 이에 앞서 국보 83호 반가사유상의 메트로폴리탄박물관 전시 출품을 놓고 찬반 논란이 있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박물관에 우리 문화재를 출품해 그 우수성을 널리 알려야 한다"는 찬성론과 "해외 전시가 너무 잦으면 우리의 국보가 훼손될 수 있다. 국보 83호는 그동안 8차례에 걸쳐 3천 일 정도 해외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또 나갈 경우 훼손의 우려가 크다"는 반대론이 맞섰다.

문화재위원회가 조건부로 반출을 허가했지만 얼마 뒤 문화재청은 반출 불가 결정을 내리면서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었다. 급기야 메트로폴리탄박물관은 청와대에 "국보 83호를 꼭 보내달라"는 출품 탄원편지까지 보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결국 국보 83호 반가사유상은 메트로폴리탄박물관 전시에 나갈 수 있었다. 이는 매우 흥미로운 논란이었다. 그런데 반출을 허가하자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 모두 근본적인 생각은 다르지 않았다. 국보 83호 반가사유상이 한국미를 대표하는 걸작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현재 전해오는 삼국시대의 반가사유상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보 78호와 국보 83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이다. 두 불상은 석굴암과 함께 한국 불교 조각의 최고 걸작으로 꼽힌다.

반가사유상은 오른쪽 다리를 왼쪽 무릎에 올린 채 깊은 사색에 빠져 있는 모습이다. 한쪽 발을 올려놓았다고 해서 '반가', 깊이 생각하고 있다고 해서 '사유'라는 이름이 붙었다. 미륵보살은 56억 7천만 년이 흐른 뒤 이 세상에 찾아와 부처가 되고 많은 중생을 구제한다는 보살이다. 미륵보살의 책임은 막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에 지금 도솔천에서 수행하면서 고뇌하고 사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 두 점의 반가사유상은 미륵보살의 이 같은 사유를 시각적으로 구현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의 중생들을 모두 불교의 가르침으로 이끌 것인지, 그들에게 어떻게 환희와 영광의 세계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반가사유상, 한국 불교 최고의 걸작

두 반가사유상을 보면 한결같이 그 자태가 매우 세련되고 우아하다. 단정하면서도 절제된 아름다움이다. 오른쪽 뺨에 살짝 갖다 댄 손에서 사유의 분위기가 깊

국보 78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6세기 후반, 높이 83.2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국보 83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7세기 전반, 높이 93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이 전해온다. 국보 78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높이 83.2㎝)은 태양과 초승달이 결합된 모양의 보관을 쓰고 있다. 몸은 곧고 늘씬하며 우아한 곡선미를 지니고 있다. 반듯하지만 은근한 율동감이 전해온다. 어깨를 감싼 천의(天衣)는 부드럽고 경쾌하다. 얼굴은 갸름한 편이며 전체적으로 여성적이면서 장식이 화려하다. 국보 83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높이 93㎝)은 봉우리가 셋인 산의 모습을 한 보관을 쓰고 있다. 78호에 비해 얼굴은 다소 풍만한 듯하고 눈, 코, 입이 좀더 뚜렷해 보인다. 목에 두 줄의 목걸이만 있을 뿐 78호 반가사유상에 비해 별다른 장식이 없어 좀 더 간소하고 담백하다. 치마 주름은 사실적이어서 입체감 생동감이 넘친다.

두 반가사유상에서 특히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다름 아닌 얼굴의 미소다. 그 미소는 종교적인 사유에서 나온 것이어서 보는 이를 한없는 깊이에 빠져들게 한다. 미소는 오묘하고 종교적이고 성스럽다. 그런데도 인간적이고 편안하다. 보살의 인간적인 자비로움이라고 할까. 저 미소를 보고 번뇌를 가라앉히지 못할 중생이 어디 있을까. 이것이 국보 78호와 83호 반가사유상의 진정한 매력이다.

2013년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박물관 특별전에 출품된 국보 83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의 전시 모습. 국립중앙박물관 제공

이들은 모두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다. 이들이 박물관으로 들어오게 된 내력도 눈여겨볼 만하다. 국보 78호 반가사유상은 1912년에 일본인이 입수해 조선총독부의 데라우치 총독에 기증하면서 그 존재가 알려졌다. 이어 1916년 총독부박물관으로 옮겨놓았다. 경북 안동지역에서 발견되었다는 얘기가 있지만 확실하지 않다. 국보 83호 반가사유상은 일제강점기 초기 일본인들이 경주에서 약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불상의 출토지에 대해서는 충청도, 경북 안동지방, 경주 오릉(五陵) 근처, 경주 남산 등 얘기가 분분하지만 정확한 물증이나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어쨌든 일본인들이 이 불상을 서울로 옮겨 놓았고 이것을 1912년 이왕가(李王家) 박물관이 구입했다. 두 불상은 광복과 함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으로 이관되었다.

국보 83호 반가사유상이 메트로폴리탄박물관의 신라 특별전에 출품됐지만, 엄격히 말하면 신라 것인지, 백제 것인지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보다 치밀한 고증이나 연구가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국보 78호 반가사유상은 삼국시대 6세기 후반에, 국보 83호 반가사유상은 삼국시대 7세기 전반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일본 교토(京都)의 고류지(廣隆寺)에 가면 일본의 국보로 지정된 목조 반가사유상이 있다. 이 반가사유상은 일본을 대표하는 국보 중의 국보다. 그런데 나무로 만들었다는 점을 빼면 그 모습이 우리의 국보 83호 반가사유상과 거의 똑같다. 당시 6, 7세기 한국과 일본의 불상 제작 기법 및 수준이나 문화 교류 양상으로 보아 일본이 독자적으로 고류지 반가사유상을 만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반도에서 만들어 일본으로 넘어갔을 수도 있고, 일본인들이 한반도 반가사유상을 보고 모방해 만들었을 수도 있다. 어느 한쪽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고류지 반가사유상의 직접적인 원천은 우리의 국보 83호 반가사유상이라는 것이 한국과 일본 전문가 대부분의 견해다.

독일 실존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는 일본의 고류지 반가사유상을 두고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가장 철학적인 예술품"이라고 칭송한 바 있다. 논리적으로 볼 때, 야스퍼스의 찬사는 고스란히 우리 83호 반가사유상의 몫이다.

이 두 반가사유상은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의 독립된 전시실에서 서로 교대로 전시된다. 그 전시실에 들어서면 사색의 분위기가 압권이다. 이곳은 어둑어둑하다. 그래서 전시공간에 들어서는 순간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잠시 후 반가사유상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다. 곧이어 진열장 유리벽에 비쳐 사방팔방에서 반가사유상의 모습이 나타난다. 그건 신비로운 체험이다. 부처의 진리가 그런 것인가. 삶의 성찰이 그런 것인가.

글·사진. 이광표 교수(서원대 문화유산학)

공정한 국회뉴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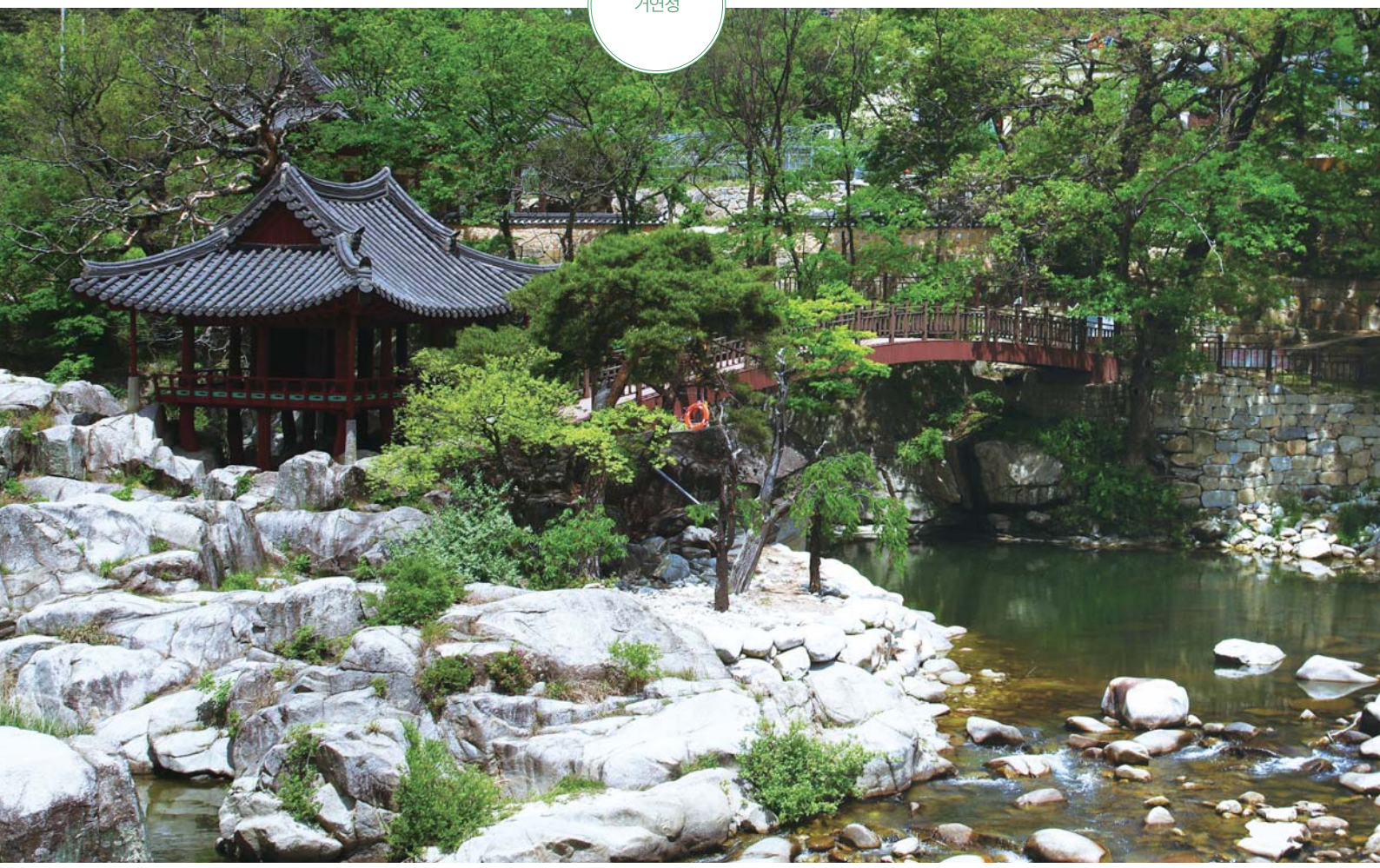
www.naon.go.kr에서 생생한 국회 소식을 만나보세요.

연둣빛 산천에 안긴 옛 사람의 정자

경남 함양 선비문화탐방로

거연정, 군자정, 동호정, 경모정, 람천정, 농월정, 화림동 계곡 6km의 물길이 옛 사람들의 정자를 품었다. 경남 함양군은 그 길에 '선비문화탐방로 1코스'라는 이름을 붙였다. 계곡 물길도 냇가 풀밭도 먼 산천도 온통 연둣빛 신록이다. 사람들도 그곳에서 푸르러진다.

거연정



자연처럼 그곳에서 쉬다

선비문화탐방로 1코스가 시작되는 곳이 봉전마을이다. 봉전마을로 가려면 경남 함양군 안의버스공용터미널에서 출발하는 군내버스를 타고 봉전마을 정류장에서 내려야 한다(버스 기사님께 봉전마을 거연정 앞에서 내려달라고 했다). 마을 입구에 '생원 세량공 효자비'가 있다. 봉전마을을 '삼강동'이라고도 부른다. 예로부터 충(忠), 효(孝), 열(烈) 3강의 윤리가 이어지고 있다고 해서 '삼강동'이라는 별칭이 붙었다고 한다.

마을 앞개울에 있는 거연정으로 발길을 옮긴다. 본격적인 걷기여행은 거연정에서 시작된다. 거연(居然), 평안하고 고요한 상태를 일컫는 말이다. 거연정 정자에 앉아 있으면 마음이 저절로 그렇게 된다. 순류하는 자연의 상태에 나를 맡기는 것이다. 조선시대 사람 화림재 전시서 선생이 이곳에서 초막을 짓고 은거했다. 그때 그의 마음도 그랬을 것이다. 정자에 앉아 자연에 은거하며 스스로 자유를 찾은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본다. 거연정은 전시서 선생의 7대 손이 1872년에 그의 뜻을 기리기 위해 지었다.

산줄기처럼 굴곡지고 물결처럼 넘실대는 모양의 기암괴석이 계곡에 가득하다. 정자는 그런 기암괴석 위에 있다. 시퍼런 물줄기가 기암괴석 사이로 고였다 흐르고 굽이쳐 흐른다. 거연정에서 가까운 곳에 군자정이 있다. 군자정은 조선시대 정여창 선생과 연관 있는 곳이다. 정여창 선생은 하동이 고향이지만 함양에서 살았고 묘도 함양에 있다. 조선시대 5대 성리학자로 꼽는 사람도 있고, 당대에 백성을 위해 선정을 펼쳤던 관리이기도 했다. 화림재 전시서 선생의 5대 손이 정여창 선생을 기리기 위해 1802년에 정자를 지었다.

군자정 옆 봉전교를 건너서 데크길로 접어든다. 흐르는 계곡물을 따라 걷는다. 물 건너 노란 꽃밭을 지나는 시골버스가 정겹다.

동호정

호성마을 푸르른 사람들

데크길은 물 바로 옆으로 이어지다 숲을 벗어나 잠깐 밭 옆을 지난다. 땀 흘려 일군 밭 옆에서 발걸음이 조심스러워진다. 길은 이내 물가로 이어진다. 물 건너에 동호정이 보인다.

임진왜란 때 선조의 의주 몽진을 도와 공을 세운 동호 장만리 선생을 기리기 위해 그의 9대 손인 장재헌 등이 중심이 되어 1895년에 건립한 정자다. 너럭바위 앞을 흐르는 냇물에 정자와 하늘과 구름이 비친다.

동호정을 뒤로하고 가는 길에 호성마을이 여행자를 반긴다. 개울가 풀밭에서 염소가 논다. 마을 길가에 붉은 꽃이 피었다. 꽃잎이 길가에, 경운기 짐칸에 떨어졌다. 이 마을에서는 꽃도 일상이니 생활의 편린도 꽃이다. 붉은 꽃 아래 서서 개울을 바라본다. 물비린내와 풀 향기가 바람을 타고 온다. 아까부터 아주머니 한 분이 허리를 굽히고 개울에서 올갱이(표준말은 다슬기)를 잡는다. 그 풍경에 마음이 푸근해진다.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두 아이들이 여울로 가는 아버지의 뒤를 따른다. 아버지의 손에는 낚싯대가 들렸고, 큰아이는 어깨에 반두를 둘러멨다. 여울 물살에 휘청거리는 작은 아이를 부축하는 건 큰 아이다. 그들은 아마도 가족

일 것이다. 엄마가 잡은 올갱이, 아버지와 두 아들이 잡은 물고기는 무릎 맞대고 둘러앉은 그들의 저녁 밥상에 오를 것이다. 연둣빛 봄물 오른 푸르른 산천, 물비린내 풀 향기 가득한 마을, 그 속에서 살아가는 푸르른 사람들이 어우러진 호성마을에서 잠깐 마음을 내려놓는다.

농월정, 화림동 계곡에 머물다

호성마을을 지나면 경모정이 나온다. 경모정은 조선시대 사람 계은 배상매 선생이 후학을 가르치며 쉬던 곳이다. 그의 뜻을 기리기 위해 후손들이 1978년에 정자를 지었다. 배상매 선생은 고려 태조 왕건을 도와 고려의 문을 열고 후삼국을 통일하는 데 공을 세운 무열공 배현경 선생의 후손이다. 경모정 앞으로 물이 흐른다. 너럭바위 위에 커다란 바위가 우뚝 섰다. 물은 너럭바위의 골을 지나면서 세차게 부서지며 흐른다. 그 소리에 마음까지 통쾌하다.

경모정을 지나면 람천정이 나온다. 낮은 다리를 지나 개울을 건너서 둑방길로 접어든다. 멀리 숲에 자리 잡은 황암사가 보인다. 황암사는 1597년 정유재란 때 왜적과 싸우다 순국한 선열들의 위패를 모신 곳이다. '황석산성 전투'에서 2만 7천 명의 왜군을 맞아 안음 현감 곽준, 함양 군수 조종도 등이 인근 거창, 초계, 합천, 삼가, 함양, 산청, 안음에 사는 주민들과 함께 싸웠는데 음력 8월 18일 황석산성은 함락되고 말았다. 1714년에 황석산 아래에 사당을 짓고 황암사라고 했다. 황석산성 전투에서 순국한 사람들의 뜻을 기리고 있다. 일제강점기에 사당이 헐리고 추모행사가 중단되는 일도 있었다.

황암사를 돌아보고 다시 길을 걷는다. 도착지점인 농월정이 멀지 않다. 농월정은 조선시대 선조 때 예조 참판을 지낸 지족당 박명부 선생이 은퇴 후 1637년에 지은 정자다. 몇 차례 중수했다. 2003년에 불에 타 사라진 것을 다시 복원했다. 농월정이 있는 계곡 풍경이 압권이다. 출발지점인 거연정이 있는 계곡 풍경을 더 넓고 크게 펼쳐놓은 풍경이다. 너럭바위와 기암괴석이 어우러진 계곡 한쪽에 농월정이 보인다. 이름에 담긴 '달과 함께 노니는 곳' 정도로는 주변 풍경을 설명하기에 부족해 보인다. 오랜 세월 물에 깎이고 다듬어진, 자연 속에 들어앉아 물소리 바람소리를 듣는다. 푸르른 숲, 계곡 바닥에서 절벽으로 이어지는 기암괴석이 무슨 소리를 내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몸과 마음을 휩싼다. 자연처럼 그렇게 스스로 그곳에 머문다.

글·사진. 장태동(여행작가)

황암사

기능에 따라 달라지는 띄어쓰기

우리말에는 형태는 같은데 문맥에 따라 조사가 되기도 하고 의존명사가 되기도 하고 어미가 되는 말들이 있다. 이에 따라 띄어 쓰는 방식이 달라지는데, 조사나 어미는 앞말에 붙여 써야 하지만, 의존명사는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예를 들어 '대로'는 "나는 나대로 할게"라고 할 때는 조사가 되어 앞말에 붙여 써야 하지만, "손 닿는 대로 도웁시다"라고 할 때는 의존명사가 되어 띄어 써야 한다. '만큼'도 마찬가지다. "나는 너만큼 부지런하다"라고 할 때는 조사가 되지만, "먹을 만큼 먹어요"라고 할 때는 의존명사가 된다.

그런가 하면 문맥의 차이로 판단하기 어려운 예들도 있다. '지'와 '데'가 그렇다. 이들은 연결되는 문맥의 차이로 구분하기 어렵고 의미의 차이로 구분해야 한다. 예를 들어 '-데'는 앞말에 붙여 써야 할지 띄어 써야 할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공부하는 데 어려움이 많지요?"와 "공부하는 데 왜 자꾸 말을 걸어요?"에서 각각의 '데'는 어떻게 다를까? '-데'가 사용된 문맥이 형태적으로는 동일하기 때문에 구분할 방법이 없다. 이럴 때는 의미의 차이로 구분해야 한다. '데'가 의존명사로 쓰일 때는 '것, 일, 경우' 등의 의미로 인식되며, '데'가 어미로 쓰일 때는 '그런데'의 의미로 인식된다. 즉 어미의 기능을 할 때는 뒤에 오는 내용과 상관되는 상황을 서술하는 의미로 인식하면 된다. 의미적 구분이 어려우면 '데'가 쓰인 곳에 조사 '에'를 붙여서 말이 되면 의존명사로 보면 된다. "공부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지요?"는 말이 되지만 "공부하는 데에 왜 자꾸 말을 걸어요?"는 말이 되지 않는 식이다.

'데'의 띄어쓰기 오류는 유명 출판사의 책이나 학위논문에서도 빈번하게 나타난다.

(1) 집단상담을 통해 집단원들은 현재와 미래의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필요한 대인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
(2) 보통 집단원의 사고, 감정, 행동을 강조하는 대인관계와 문제해결 전략을 강구하는데 초점을 둔다.

위의 예문에서 '는데'는 '는 데'로 띄어쓰기를 하는 것이 맞다. '데'에 '에'를 붙여보면 말이 됨을 알 수 있고 이럴 때에 '데'는 의존명사의 구실을 하는 것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지'의 구분은 더 쉬운 편인데 '지'의 띄어쓰기 오류 역시 빈번하게 나타난다. '지'는 어떤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경과함을 의미할 때에만 의존명사의 구실을 한다. 예를 들어 "그를 만난 지 꽤 오래되었다"에서 '지'는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므로 의존명사이다. 이런 경우가 아니면 모두 어미로 간주하면 된다. 그런데 '춥지 않다'와 같이 연결어미로 쓰일 때에는 띄어쓰기가 헷갈리지 않는데,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 중이다"와 같이 목적절 안에 쓰일 경우에 어미 '지'를 마치 의존명사인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신문 기사에서도 이러한 오류가 꽤 발견된다.

(3) 다만 이를 소방관의 국가직화를 통해서 할 지 아니면 다른 방식의 재정 지원을 통해 할 지는 논의를 해봐야겠다는 것입니다.

이 문장에서 '지'를 띄어 쓴 것은 잘못이다. 시간 경과의 의미가 아니고 목적절 속의 어미로 쓰인 상황이므로 앞말과 붙여 써야 한다.

글. 김미형 전국국어문화원연합회 회장(상명대 한국언어문화학과 교수)

‘재야정당’, 민추협 탄생

미국에서 귀국한 김대중 전 대통령(왼쪽)이 민추협 공동의장 취임 환영식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1985. 3. 18)

1984년 5월 18일,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상징적 존재였던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가 결성됐다. 광주민주화운동 4주년을 맞아 거행된 이날 결성식에는 ‘정치풍토쇄신을위한특별조치법’으로 제도권에서 추방되어 정치활동이 금지된 인사들이 주축을 이루었다. 지도부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고문(顧問)을, 김영삼 전 대통령이 공동의장을, 김상현 전 의원은 공동의장 권한대행을 맡았다.

민추협은 결성식에서 ‘민주화 투쟁 선언’을 발표했다. “우리는 이 땅에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 국민 모두에게 주어진 절대적 사명임과 민주주의는 오직 국민의 투쟁에 의해서만 이룩될 수 있는 것임을 선언한다…”로 시작하는 9개항을 김녹영 전 의원(제12대국회 부의장 역임)이 낭독했다. 9개항에는 ‘군인의 정치 개입이 민주 헌정을 후퇴시키고 안보상의 불안을 초래한 만큼 군 본연의 사명인 국방의무로 복귀할 것,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 실시,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투쟁할 것’ 등을 담았다.

민추협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기까지는 어려움이 많았다. 참여인사 중 정보기관에 불려가 탈퇴 종용 협박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을 정도였다. 정보기관의 방해로 건물주들이 민추협에는 임대를 해주지 않아 동창회 등의 명의로 계약했다가 사실이 알려져 쫓겨나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서울 종로구 관철동의 한 건물에 입주했을 때 경찰이 사무실 집기를 들여놓지 못하게 해, 돗자리를 깔고 회의를 열 정도로 탄압을 받았다. 정보기관원들이 수시로 들이닥쳐 서류를 통째로 가져가는 바람에 활동기록도 거의 없다고 한다.

민주화운동의 중심에 섰던 민추협은 김영삼·김대중 두 공동의장이 나란히 대통령을 지냈고 정치인들은 민추협 활동을 큰 자부심으로 여겨 총선 등 출마 때 ‘훈장’처럼 정치경력에 올렸다. 공동의장 권한대행이었던 김상현 전 의원은 “규약이나 강령도 없이 활동한 민추협이지만 정치적으로 가장 성공한 단체”라 말한 바 있다.

글. 김종해

인사청문회 개최와 4·3 보궐선거 등

2019. 4. 1 ~ 4. 30

1
- 문재인 대통령,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3월 31일)

2
- 더불어민주당·행정부·청와대, 고위당정협의회 갖고 추가경정예산 편성하기로 뜻 모아
- 문재인 대통령, 국회에 행정안전부 진영·해양수산부 문성혁·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통일부 김연철 등 4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
- 검찰,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3차 소환조사

3
-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제71주년 4·3 희생자 추념식' 열려

4
- 경남 창원·성산과 통영·고성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정의당 여영국 후보와 자유한국당 정점식 후보가 각각 당선
- 국회운영위원회, 법안소위 복수설치와 매월 2회 소위 정례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국회개혁 1호 법안인 '법안소위 활성화' 법안 통과

5
- 대형 산불이 발생한 강원도 일원에 '국가 재난 사태' 선포

6
- 강원도 고성군·속초시·강릉시·동해시·인제군 등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8
- 제368회국회(임시회) 개회(5월 7일까지 계속)
- 문재인 대통령,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 재가

9
-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열고 강원도 산불 피해 현황 파악 및 대책 논의
- 법제사법위원회, 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열어

10
- 문희상 국회의장,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식 기념사에서 "국회가 국무총리를 복수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추천 후보 중에서 임명하는 개헌안을 내년 총선 때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
- 법제사법위원회,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11
- 문재인 대통령,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 갖고 북한 비핵화와 북·미 대화 재개 문제와 방위비 분담금 등 한·미 간 현안 논의

16
- 문재인 대통령, 문형배·이미선 등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위해 인사청문경과보고를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

17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KT 화재원인 규명 및 방지대책에 대한 청문회' 열어
- 제주도, 국내 제1호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 상고심 재판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검에 형 집행정지 신청

19
- 문희상 국회의장, 4·19혁명 59주년을 맞아 국립 4·19 민주묘지 참배
- 문재인 대통령,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재가

22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 원내대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등 추진 합의
- 미 행정부, 한국·중국·일본 등 8개국의 이란산(産) 원유 수입 금지 조치 예외 적용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23
- 바른미래당, 의총 열고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과 관련한 표결에서 찬성 12명, 반대 11명으로 추인이 가결된 가운데 이언주 의원은 탈당 선언

24
- 자유한국당 의원, 사법개혁특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 사보임 문제와 관련해 문희상 국회의장 항의 방문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북러 정상회담 위해 러시아로 출발

25
- 바른미래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을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는 사보임 신청서를 팩스로 국회에 제출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정상회담 가져
- 검찰,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비서관 불구속 기소

정리. 김종해

신선한 숲 같은 정치

30년 동안 주말 등산을 계속하는 것에 대해 동기를 물어오는 지인이 많습니다. “힘들텐데 왜 계속하느냐”라고 물어오는 것이죠. 대부분은 “그저 오른다”고 답해줍니다. 그런데 자세히 물어오면 “신선한 산소 공장인 숲길을 종주하면 몸과 마음이 재충전된다”고 답하기도 합니다. 미세먼지가 공포 수준인 요즘은 이런 대답을 자주 합니다.

미세먼지는 수년 전부터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됐습니다. 피서나 피한이 아니라 비교적 미세먼지가 적은 강원도 강릉 등지로 미세먼지를 피해 여행을 간다는 “피미(避微) 여행간다”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죠. 우리 모두 에너지 과소비형 생활을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미세먼지 공포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는 지난 겨울 특히 심했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두려움이 고조되며 피미여행이라는 낯선 말이 보통명사처럼 쓰입니다. 국회보도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해 이번 호에서 미세먼지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특집을 다채롭게 꾸려봤습니다. 참고자료 역할을 위해 국내 전문가들은 물론 해외의 사례도 취급했습니다.

지독한 미세먼지는 숲의 중요성을 부각시켰습니다. 나무들이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를 줄이고 신선한 산소를 만들어내는 사실이 주목받아서입니다. 국회도 5월 중순부터 국회경내 잔디마당과 의원동산 사랑재 주변, 그리고 헌정기념관 앞 숲 등지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하루 두 차례 숲해설을 시범실시합니다. 혹서기, 혹한기는 쉬게 됩니다.

숲의 생명체들은 정교한 공생관계를 보여줍니다. 정치도 공생관계가 바람직하겠죠. 역사상 일당독재는 일방독주하다가 망했습니다. 반면 여야가, 여러 정당이 공생하는 민주정치는 흥했습니다. 강한 야당의 견제가 강한 정부여당을 만든다는 분석은 공생정치의 중요성을 뒷받침합니다. 숲길을 걸으며 때로는 공생정치를 생각하고는 합니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듯 한반도 주변 정세나 국내 정치 상황이 흐릿합니다. 특히 갈등관계 해소 조짐이 안 보이는 일본과의 관계는 우리 외교의 무거운 과제입니다. 일본은 2019년 외교청서를 통해 “한일관계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날을 세우는 대신 미국, 중국과는 밀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회외교의 역할이 절실합니다.

국회는 4월 말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4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선거제 개혁 등을 신속처리대상안건(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하며 파열음이 났습니다. 국민들은 일하는 국회, 신뢰받는 국회를 기대합니다. 국회가 정상 작동, 신선한 공기를 선사하는 숲 같은 정치를 해달라는 국민 요구에 응답해주길 소망합니다.

이춘규
홍보기획관·편집인

국회문화극장

< 창작 판소리 - 북극가 >

환경오염과 지구공유에 대한 이야기를
'서울에 사는 백수', '북극에 사는 북극곰' 캐릭터를 활용하여
영상, 카툰 등의 요소를 넣어 판소리로 풀어낸 작품

- 일 시 : 2019. 5. 16(목) 오후 7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
- 출 연 : 김봉영(작창), 유정민(배우), 김승진(건반), 한림(아쟁), 박진욱(베이스), 장태순(드럼) / 엠제이플래닛
- 예 약 : 국회문화행사홈페이지 (http://culture.assembly.go.kr)를 통해 5월 7일(화)부터 예약 가능 (1인 최대 2인까지 예약 가능)
- 문 의 : 국회사무처 홍보담당관실 02-788-3111~2

국회아트갤러리 작품전

< 나의 가족, 사랑하나요? >

- 기 간 : 2019. 5. 1(수) ~ 2019. 5. 30(목)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1층 아트갤러리
- 전시품 : 전이수 〈엄마와 아들〉 등 회화 14점
- 문 의 : 국회사무처 홍보담당관실 02-788-2296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 특별전

< 임시의정원, 미래를 품다 >

- 기 간 : 2019. 4. 3(수) ~
- 장 소 : 국회헌정기념관 B1층 기획전시실
- 문 의 : 국회사무처 홍보담당관실 02-788-2296

대한민국국회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